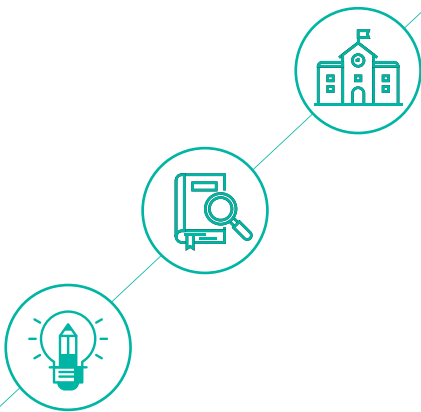


2022년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일러두기

- ◆ 본 자료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인사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검토·논의하여 제작하였으며, 『2018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울산광역시교육청)』, 『2019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경상남도교육청)』,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을 참고하였습니다.
- ◆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반영하여 임용, 복무, 휴가,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업무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를 인용하였습니다. 인용된 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은 개정이나 폐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시점에서는 현행 법령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적 성격의 자료이므로 업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기준)을 따릅니다.

CONTENTS

제1장 사립학교 일반총론

제1절	목적, 적용, 관련 법규	3
제2절	사립학교법의 이해	5
제3절	학교법인의 이해	7
제4절	관할청 지도 감독권	10
제5절	교원인사위원회	12

제2장 사립학교 교원임용 일반

제1절	임용의 정의 및 시기	23
제2절	임명의 제한 및 결격사유	28
제3절	교원의 자격	32
제4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40

제3장 사립학교 임용의 실제

제1절	교장의 임용	45
제2절	교감의 임용	56
제3절	교장(감)의 직무대리	58
제4절	신규 교사 채용	60

제4장 복무·휴가

제1절	교원의 복무 및 청렴	73
제2절	교원휴가	85

제5장 휴복직, 면직, 퇴직

제1절	휴직제도의 개요 및 일반사항	103
제2절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110
제3절	면직	134
제4절	퇴직	138

제6장 전보·파견, 자격

제1절	전보·파견·겸임	143
제2절	자격변동	149
제3절	과목변경	150

제7장 징 계

제1절	징계 일반	153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155
제3절	징계심의위원회	160
제4절	징계 절차	163
제5절	소청심사 청구	177
제6절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181

제8장 기간제교원 및 교원의 호봉

제1절	기간제 교원	187
제2절	교원의 호봉	203

CONTENTS

제9장

판례 및 사례, 질의회신

제1절 교원의 임용	227
제2절 교원의 복무	242
제3절 교원의 징계	256

제10장

교원 임용보고 서식(예시)

제1절 임용보고 서식	273
-------------------	-----

2022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

제 1 장

사립학교 일반총론



제1절 목적, 적용, 관련 법규

1 목 적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련 지침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인사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의 투명성·효율성·합리성 추구
- 인사 관련 서식을 현행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정비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인사업무 실무자의 편의 도모
-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인사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교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장하고 교원들의 사기 양양에 기여

2 적 용

- 본 편람은 시행일 이후 해당 시·도 교육청 관할 사립학교에 적용됨.
- 공·사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나 편람을 인용한 경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 “교육공무원”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봄.
- 서식이나 예시의 날짜 등은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의 날짜 등으로 변경하여 적용
-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음에 유의할 것.

3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원자격검정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학교법인 정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조례, 편람 등



제 2 절 사립학교법의 이해

1 사립학교법의 의의

가. 개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학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학교 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를 국가법규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법률로서 사학 교육 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통제 등의 규율을 행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의 의미를 지님.
- 2)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 기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목적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특수성

-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건학정신과 학풍의 존중이 필요하며 「교육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2) 자주성과 공공성

- 「헌법」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하여 교육의 공공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회의 가치관이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목차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 • 관할청의 범위 등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제5조~제9조	• 학교법인의 자산, 사업, 주소, 등기, 권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설립	제10조~제13조	• 설립허가, 출연자의 정관기재, 정관의 보충, 설립의 시기 등	
제3절 기관	제14조~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선임·임기·직무, 개방이사 등 •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 등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임시이사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 법인 및 학교 회계에 관한 사항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제42조	•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제4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해산명령과 청문 	
제3장 사립학교 경영자	제50조~제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 학교법인 관련 조항 준용 규정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 자격·임면·복무	제52조~제55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위원회 • 기간제교원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제60조의3	• 휴직·면직·당연퇴직·직위해제·명예퇴직·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제3절 징계	제61조~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및 징계 의결의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70조~제72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 • 사무기구와 직원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위임 • 사학기관 행동강령 • 사무직원의 임용
제6장 벌칙	제73조~제74조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제 3 절 학교법인의 이해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 사립학교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 사립학교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2 학교법인의 의의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항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립·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나. 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를 열거하고 있음.

다. 같은 조항에서 열거하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장이 없음.

(※사립학교법이 개정(2016.12.27.)됨에 따라 2017.3.28.부터 특수학교도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음)

3 사법상 재단법인

가. 재단법인으로서 특수한 학교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 의무 주체이므로 설립자와 독립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지·경영활동을 수행함.

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재산 출연 행위
- 2) 출연한 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관 작성 행위
- 3) 법인의 이익을 지켜줄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진 구성

4 이사회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이사는 학교법인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집행하며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와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무 처리.

☞ 법인의 이익을 지켜줄 자연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진 구성

나. 이사는 학교법인의 목적과 정관의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임용을 비롯한 학교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함.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교법인의 권한 행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여야 함.

※ 이사장 :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하는 자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아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 4. 7., 2016. 2. 3.〉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5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 능력에 관하여는「민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절 관할청 지도 감독권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2 관할청 지도 감독의 의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학교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 발전의 자양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맡겨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적 개입과 감독이 필요함. 그러나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는 법인의 자주적 운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적인 개입과 규제가 교육적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과도하여 법인 운영의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관할청 감독권 행사의 원칙

가. 보충성의 원칙

- 학교법인이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과 법령을 준수하여 설립자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 한 관여할 여지는 적다. 그러나 설립 취지나 법령을 위반하면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또는 비록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법인 스스로가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적 개입이 이루어짐.

나 비례성의 원칙

- 관할청의 지도·감독은 처분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며, 그 조치로써 달성하려는 효과와도 비례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4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권한 관련 조항

- 관할청(법 제4조)
- 학교법인 설립허가(법 제10조)
- 정관의 보충(법 제11조)
- 이사회 의 소집승인(법 제17조제4항)
- 임원의 취임 승인(법 제20조제2항)
-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법 제20조의2)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법 제20조의3)
- 임시이사의 선임(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해임(법 제25조의2)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법 제25조의3)
-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 등 처분 허가 및 신고(법 제28조제1항)
- 예산 및 결산의 시정지도(법 제31조제2항)
- 학교법인 합병인가(제36조제2항)
- 정관변경의 보고 및 시정(법 제45조)
- 학교법인 해산명령(법 제47조)
- 감독상 필요한 경우의 보고서 제출요구 및 검사(법 제48조)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법 제48조의2)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필기시험 위탁 의무(법 제53조의2제11항)
-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법 제54조)
- 학교장의 해임 요구(법 제54조의2)
- 징계의결의 재심의(법 제66조의2)
- 교육 및 통계관련 보고 요구·조사(법 제70조)
- 사학기관 행동강령(법 제72조의5제4항)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벌칙(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 학교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법 제74조)



제 5 절 교원인사위원회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2 목 적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각급 학교의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함.

3 성 격

- 교원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복직 뿐만 아니라 모든 임용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심의기구로 운영

❖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법적 심의기구인가? 자문기구인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법적 심의기구임.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외)의 교원(학교의 장의 제외)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둬.

4 조 직

- 학교 전체 교원의 의견(연령별 대표성, 성별 구성비율, 교과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는 홀수 단위로 5~9명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함.

5 기능(심의사항)

-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법 제53조의4)
-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1조제4항)
- 기간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매년 해당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법제처 법령해석)
-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법제처 법령해석)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법제처 법령해석)
-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제처 법령해석)

❖ 교원의 임용사항이란?

교원의 임용 사항(학교장 인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①항)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항, 개정 2021.8.10.)

6 운 영

가. 회의 소집에서부터 위원별 발언 및 토의된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회의록을 기록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법정 필수기구이므로 회의 소집에서부터 위원별 발언 및 토의된 내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회의록을 기록하여 모든 위원의 서명 날인 후 학교장에게 보고 및 보관

나.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권을 보장하여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한 기속력은?

- 1)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은 교원의 인사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6두 17949, 판결)
- 2)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 결여 시 책임자 문책 사유에 해당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원칙과 방법은?

1) 위원회 구성 원칙

- 가) (정관기재)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함(법 제53조의4 제2항)
- 나) (민주적 구성)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권한남용 방지 및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심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구성 필요
⇒ ‘심의(審議)’는 ‘심사론의(審査論議)’에서 비롯된 말로 ‘자세히 살피고[審] 조사하여[査] 논의(論議)함 (국립국어원)
- 다) (감사 사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신규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교감연수대상자 선정 시 사전 심의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추인에 그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침해 다수 확인, 지적 사항 치유를 위한 재심의 요구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일자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참가위원들이 날인하고, 전자문서 등록 후, 10년간 공공기록물로서 보관

2) 위원회 구성 방법

- 가)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일방적인 위원 구성 금지
- 나) 교원 전체회의에서 연령별 대표성, 성별 구성비율, 교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선출
⇒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사(장) 및 교장은 겸임할 수 없다.
⇒ 교원인사위원은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 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 단위로 5 ~ 9명으로 구성
- 라) 학교장 및 행정실장 교원인사위원 임명 금지

❖ 국·공립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차이는?

	국·공립	사립
근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장 제34조 및 제35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명칭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성격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자문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담임 배정 및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의 기준 • 기타 인사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인사 중요사항 •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간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유의사항

- 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해당학교 실정에 맞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세칙(표준안 참조)을 마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함.
- 나. 인사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심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한 것은 무효임.
- ※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담임 배정을 제외한 사건에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두17949 판결)
- 다. 법인이 신규 교사 채용에 따른 공개 전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교감연수대상자 선정 등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사전에 정한 후 형식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는 행위는 불가함.
- 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해당 임용 보고 서류 일체를 반려 후 시정 조치함.

참고 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 08-0143)

종전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3조의3제1항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정관 입안 지침인 「학교법인 정관준칙」(교육인적자원부 예규, 2005. 5. 폐지됨) 제52조제1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신규채용·전보·전직·승진·파견 등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직 뿐만 아니라 모든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상 “임면”의 의미는 “전보·전직·파견” 등 보직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임면’이라는 용어는 ‘임용’으로 개정(전문개정 2016. 2. 3.)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표준(안)

제정 0000.00.00.

개정 0000.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와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조에 따라, 위원회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정하고,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4항, 개정 2021.8.10.)
- ② “전보”란 교원의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동일법인내의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및 자격)

- ① 위원회는 총 ()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은 매년 ()월 전체 교원회의에서 연령별 대표성()명, 성별 구성비율()명, 교과 대표성()명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다득표순)에 따라 선출하며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본교에 재직하는 학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해당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제 교원의 피선거권은 전체 교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임원)

- ①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 서명을 받는다.

제6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임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신규교원의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④ 교감임용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⑤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⑥ 전체 교원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⑧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⑨ 인사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교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전자 문서로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권한)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인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요구는 결과 보고 후 3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요구한다.
-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심의

제12조(신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의 교원 임용 절차에 의한다.

제13조(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 ① 전체 교원회의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 순으로 상위 ()명을 정한다.
- ② 민주적인 절차로 교원의 의사가 반영된 최종 후보 ()명의 순위를 명시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③ 교감 임용 대상 후보자는 1급 정교사로서 교직 경력 ()년 이상, ()학원 근무 경력 ()년 이상이며 담임 또는 부장 경력이 ()년 이상 있는 이로 매년 해당 시·도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제14조(학급 담임교사 배정)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 ① 각 교과별 학년 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위원회는 교과협의회의 조정 사항을 존중한다.
- ② 담임 배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학년 및 학급의 담임을 맡도록 고려한다.
- ③ 동일교사가 ()년 이상 연속하여 담임을 맡지 않도록 고려한다.
- ④ 동일교사가 ()년 이상 연속하여 담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⑤ 교과별로 교사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사는 본인이 담임을 희망하지 않을 시 담임 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질환 소지자, 당해 학년도 출산 예정 교사
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업무 담당교사
- ⑦ 부담임은 담임 배정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부담임 배정 원칙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고려한다.
- ⑧ 당해 학년도 학년부장을 제외한 보직교사는 담임 배정에서 제외하도록 고려한다.
- 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수 추천한다.

제15조(업무분장)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배정한다.

- ①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며, 교과와 관련된 업무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교사 1인에게 업무가 편중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 ③ 담임과 수업 시수가 많은 교사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④ 같은 부서에 희망자가 편중되거나, 동일 업무에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년도 동일 업무 담당자를 존중하되, ()년 이상 연속해서 동일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희망교사가 없는 부서나, 희망 부서에 배정되지 않은 교사는 위원회에서 교육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⑥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배수 추천한다.

제16조(보직교사 임용 대상자 추천)

- ① 본교 근무 경력 ()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교육 경력과 지도성, 업무처리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한다.
-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년 동안 보직교사 경력 ()년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③ 보직교사 결원 시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배수 추천한다.
- ④ 해당 시·도교육청 초·중등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서훈 대상자 추천) 포상, 서훈을 위한 대상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한다.

- ① 이미 동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특별한 단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해당 포상에 관련된 자 중에서 교육에 끼친 공헌도와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포상 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나 부서에서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④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연수대상자 추천)

- ① 관계 규정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주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심의하며,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 연령, 본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한다.
- ②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③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우선으로 한다.
 - 가. 현재 연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 나. 다음 연도에 연수와 관련된 교과, 업무를 담당할 교사
 - 다. 본교에 장기 근속한 자로서 기여도가 높은 교사
 - 라. 교육 경력이 상위인 교사
- ④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이의 제기)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사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한다.

제20조(의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원들은 수용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교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원회의에서 전체교원 2/3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시하고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개정한다.

제22조(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의 시기) 학급 담임 배정 및 교무 업무 분장은 ()월 중에 한다.

제23조(전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의한다.

제2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교원인사위원회 세부점검항목 및 예시

항목	정관(규칙)검토	확인 (OX)
교원 인사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단위학교명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교원인사위원회 기능 규정이 있다.	
	교원인사위원회 조직 규정	
	교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있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간사(간사와 서기는 겸할 수 있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한다”와 같이 위원 정수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있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최소 5명~최대 9명)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이 있다.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및 결과 공개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전자문서로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의 사항 및 절차 준수	규정 개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전체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다.	
	신규교사 임용 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해당연도 해당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교감 자격연수대상자(교감 후보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해당 시·도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시행계획 참고)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심의 기준이 있다.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교과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포함)	
	교원의 연수대상자 선정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심의 기준이 있다.	
	기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 기준이 있다.	

제 2 장

사립학교 교원임용 일반



제1절 임용의 정의 및 시기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및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및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및 제74조(과태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및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8. 10. 시행 2022. 2. 11.〉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4조(과태료)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입법예고 2021. 11. 25.>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 ⑥ 그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⑦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2 임용의 정의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3 임용원칙

가. 학교의 장의 임용

-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이 임용(사립학교법 제53조).

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1)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이 임용하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단,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3)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교육공무원법 제10조)

다. 기간제교원

- 당해 학교 교원 임용권자가 임용하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학교법인의 권한 행사

-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16조(이사회의 기능)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인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권한행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여야 함.
- ※ 이사장 :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하는 자이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아님.

5 임용시기 및 임용일

가. 임용시기

- 1)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사망일까지는 근무일임)
- 3)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말일자(2월 말일, 8월 31일)로 처리
- 4) 임용 시 임용일자는 경력에 포함되고 면직일자는 경력에서 제외함.

(의원면직의 경우 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면직 전일까지를 근무일로 봄)

※ 근무종료일은 퇴직일 전일이며, 기간제교사나 강사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근무종료일임

참고 임용 시 임용일자는 경력에 포함되고 면직일자는 제외하는 경우 교육경력 산정

- 2020.9.1. 임명, 2021.8.25. 면직의 경우 경력은 2020. 9. 1. ~ 2021. 8. 24.까지 임
- 2020.2.29.이 면직일이라면 2020.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

나. 임용일

- 1) 정기인사: 3월 1일, 9월 1일
- 2) 정년퇴직, 명예퇴직(특별승진): 2월말일, 8월 31일
- 3) 수시인사(결원보충 인사): 임용장 교부일

다.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음.

-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6 임용발령

가.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나. 임명장 또는 임용장 교부

- 임용권자는 교원의 신규 채용, 승진, 전보 시 해당 교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

다.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 전보, 강임, 강등,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확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 시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라. 인사기록카드(나이스 포함) 및 발령대장의 기록·보관

7 교원임용 보고

가. 관련근거

- 1)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제1항 및 제74조(과태료)제2항
- 2) 같은 법 시행령(교원의 임용 보고)제23조

나. 임용보고

- 1)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 2) 미보고 혹은 허위 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고·특수·각종학교 ⇒ 시도교육청(단, 시도별 상이)
 -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10장 교원 임용 보고 서식> 참조
 - 임용 보고 서류는 소속 학교에서 법인서류를 파일 첨부(스캔 등)하여 전자문서로 발송(원본은 학교 보관)

참고 교원 임용보고 시 유의사항

1. 임용절차 반드시 준수
2. 임용보고 시 고시된 서식에 따라 보고(⇒ 임의로 작성한 서식인 경우 다시 보고)
3. 반드시 NEIS 등재 확인
4. 담당과목과 자격증 표시과목 확인(상치과목 신규 임용 불가)
 - ※ 학교법인 책임하에 정원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임용보고 누락시 해당 교원에 대한 불이익 발생으로 민원 발생
 - ✓ 관할청에 임용이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만 인정
 - (관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제 2 절 임명의 제한 및 결격사유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제5항 및 제6항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됨

2 임명의 제한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 1) 금품수수 행위
-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다만,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결격사유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종의 결격사유 적용)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징계에 의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결격사유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제4호(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됨.

참고 임용결격자에 대한 처리 절차

- ◎ 임용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당연무효로서 당초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당연무효의 통지·확인 성격)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 ◎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발령조치
- ※ 근무기간 중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제 3 절 교원의 자격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별표1] 및 [별표2]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함)

가. 교장과 교감

-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나. 교사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다. 수석교사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이 검정·수여함.

라. 자격종별

학교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 2급)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 등 초 등 유치원	정교사 (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학교별	자 격	교 장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기술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교별	자격	교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 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 경력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학교별	자격	정교사(1급)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학교별	자격	정교사(2급)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별	자격	정교사(2급)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학교별	자격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중등학교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 (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 (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학교별	자격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年數)는 교육경력연수(年數)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별	자격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중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특수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제 4 절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사립학교 교원 배치 기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24377호)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 정하는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을 준용하며 공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과 연동하여 운영함.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제40조(특수학교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2 교원 정원의 원칙

가. 교감의 미배치

- 1)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2) 5학급 이하 학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함.

나. 총 정원내 과원교사는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인사이동을 통하여 해소

3 교원 정원의 기준

가. 신규교사 채용시 「신규채용협의」공문을 교육청으로 제출하여 교사 정원 변동에 대한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실시(최소 임용예정 3개월 이전에 협의)

나. 학교 교육과정 이수단위 편성표 및 시간 배당표에 의거 과목별 교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다. 교사가 교감 직무대행을 할 경우 이 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없음.

라. 사립학교 교원 정원 기준

- 1) 관리책임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 2) 관리원칙: 교육청에서 배정(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교)한 교원 정원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단위 편성표 및 시간 배당표에 의거 과목별 교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과목별 정원관리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등)는 교원배치 및 정원 배정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참고 > 정원관리 주의 사항

1. 교과교사 과목별 정원 관리 철저

(학교법인) 배정된 정원내에서 과목별로 정원 내역을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근거나 절차 없이, 교원정원관리를 하지 않아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법인에서는 교원 정·현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함

2. 과목변경 임용 관리

(요건) 과목별 현원이 정원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 교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의 표시과목이 총원코자 하는 과목과 일치된 교원 중에서 책임자가 있는 경우 (절차) 과목별 정원을 산출하여 배정한 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학교(재단)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행함

4

교원정원 배치 기준

가. 근거: 초·중등학교법 제19조 제4항

나. 교과교사: 학급수별 교과교사 정원은 매 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과교사 정원 배정 기준표에 의하여 배정

다. 진로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반드시 적절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름〉

제 3 장

사립학교 임용의 실제



제 1 절 교장의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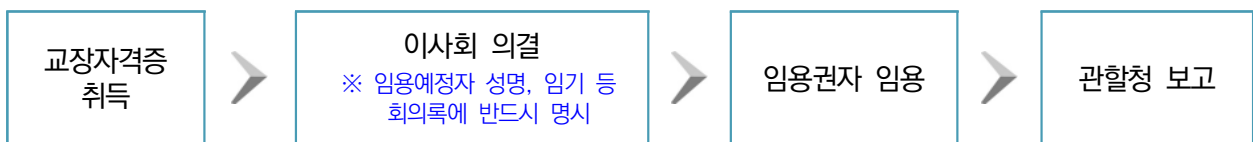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별표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제5호
-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1항 및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1항 및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및 제54조의2(해임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2 임용권자

-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함

3 임용 절차



가. 교장은 반드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

나.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동일법인 소속 학교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거쳐 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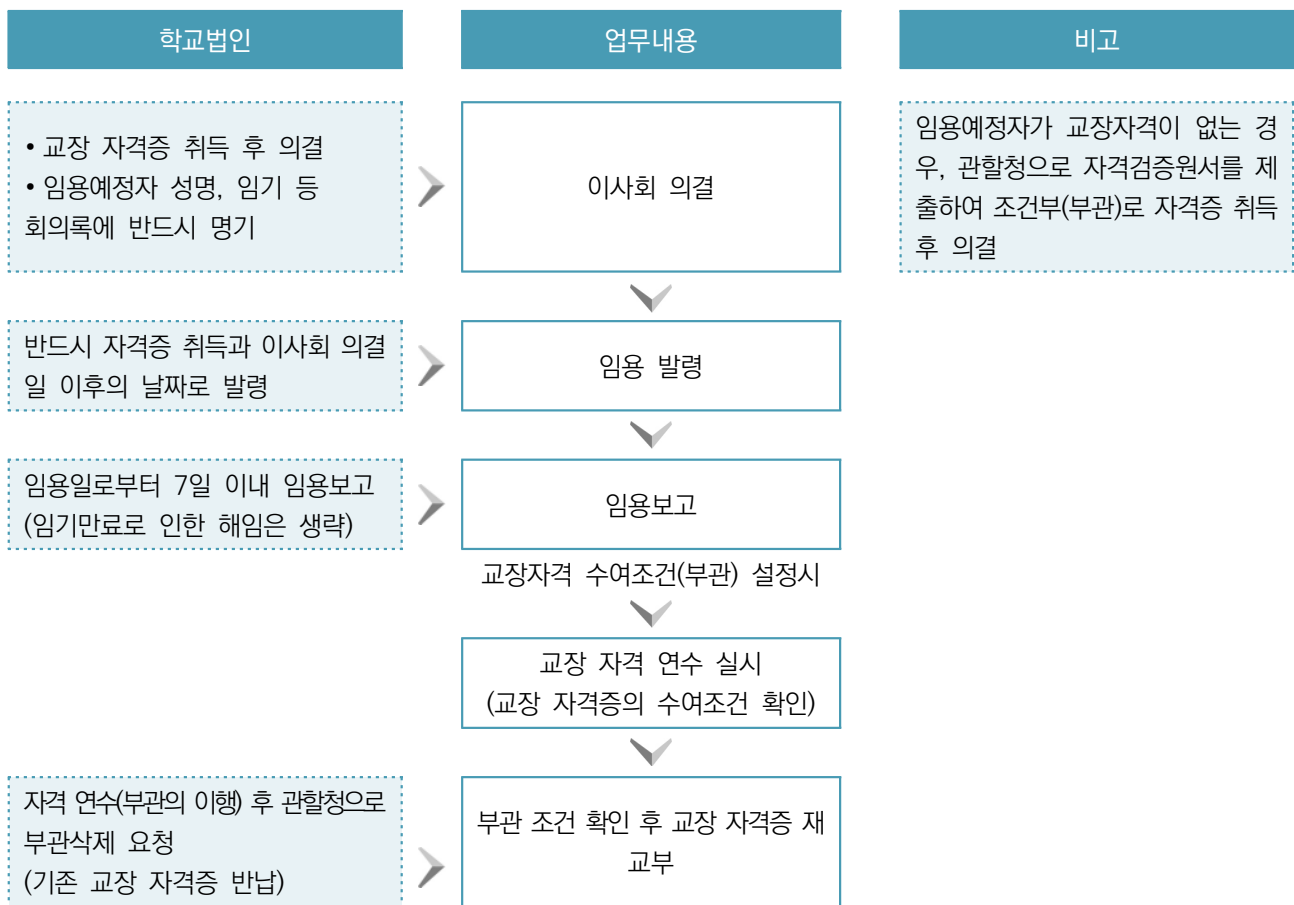
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자격인정 검정으로 임용할 경우

참고 교장 자격인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1]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교장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사회에서심의·의결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임용예정자 성명, 임용 예정 학교, 임용예정일, 임용 기간 등 명시하여 교장 자격 인정 검정원서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임용하기로 의결한 회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임용할 수 없음

※ 업무 흐름도



❖ 교장 자격 인정 검정으로 임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1]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교장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사회에서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관할청에 교장 자격 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부관(연수이수조건 및 기한 등)설정된 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함

4 임기

- 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학교장 임용 시 중임제한 검토 철저

참고 임기가 만료된 교장의 신분

초임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교장으로서의 재임용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용(중임)을 받지 못하면 교장으로서의 신분 관계가 종료되므로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됨(대법원판례 94다4288)

- 나. 임용권자가 같은 동일 학교법인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관계없이 학교장의 임기는 최대 8년임. 단 임용권자가 다른 학교법인의 학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초임으로 간주함
- 다.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원로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학교법인 정관에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5 교장 임용시 유의사항

- 가. 학교장 임명 시 중임제한 검토 철저

-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3항

① 정관상 임기내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을 임기 1회로 적용함

⇒ 법인 정관상 교장 임기가 4년일지라도,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장 임기를 1년으로 의결하여 관할청(교육청)에 학교장 임명보고 한 경우 → 관할청(교육청)에서는 이를 학교장 임기 1회로 간주

(예시)

- ㉠ 학교법인 A고등학교장(초임 4년) → ㉡ 학교법인 B고등학교장으로 임용 (중임에 해당)
 ㉢ 학교법인 A중학교장(초임 4년) → ㉣ 학교법인 B고등학교장으로 임용 (중임에 해당)

② 임용권자가 다른 학교법인 학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초임으로 간주함

법인명	학교명	성명	임기	비고
A학교법인	A법인 소속 여자고교	홍길동	2017. 3. 1~2020. 2. 29(3년)	초임
	A법인 소속 남자고교	홍길동	2020. 3. 1~2021. 2. 28(1년)	중임
B학교법인	B법인 소속 여자고교	홍길동	2021. 3. 1~2022. 2. 28(1년)	초임

☞ 위와 같이 A학교법인 소속 남·여 고등학교에서 초임 및 중임 이후, 임용권자가 다른 B학교법인 소속 여자고등학교 학교장 임용은 가능함 (초임으로 간주)

참고 사립학교 교장의 중임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대법원판례 2015두55219)

나. 학교장 임용관련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시 학교장 임명기간을 명확히 의결 및 기록할 것

참고 사립학교 교장 임기 기간

※ 이사회 회의록에 임명기간(예시:2016.3.1.~2020.2.29. 4년, 초임)을 반드시 기록

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 : 2016.3.1.부터 2020.2.29.까지

예2)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62세 정년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임기 : (임용일)부터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예3) 임기(4년만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 : (임용일)부터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6 임명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나. 학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 사례

관계 사례 1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가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예시) A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A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관계 사례 2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되는 경우 예시) A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특수관계자인 배우자가 나중에 A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 위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조치할 사항

⇒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의 특수 관계 시 임명승인 신청안내

- ◆ 임명승인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 ◆ 승인신청 시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 임명 이전
- ◆ 승인신청 절차

기관구분	제출 요령
사립초·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2곳으로 공문 시행
사립고·특수학교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시행

◆ 제출서류

1. 학교장 임명 승인 신청 공문 1부(붙임 1 참고)
2.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회신서 1부(해당자)
4. 결격사유 조회서 1부(해당자)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자체점검표 1부

7 면직 처분

- 면직의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해임 처분

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 각급학교의 장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에 해당할 때는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나. 요건

- 상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 절차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해임(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해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함

9 교장 자격취득

가. 교장 자격연수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별표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 등의 범위)

2) 자격기준

- 교장 자격연수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시도교육청별 자격 기준에 따름..)
-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 중 중등·초등·특수학교 교장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

(교육경력 산출기준일: 2월말)

학교급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추천대상학교 및 선정 우선순위

- 추천일 현재 교장의 결원 또는 직무대리 운영 학교
- 추천일 현재 학년도 말에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
- 차기 학년도 중 교장 임기만료 및 교장의 퇴직이 예상되는 학교

4) 대상자 선발 및 지명

- 자격기준(자격 및 경력)에 부합하는 자로서 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지명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내에 비현직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이 불가하며 추천하더라도 지명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참고 ▶ 자격대상자 자격 제한

- 학교폐지(폐교)로 인해 비현직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발생한 학교
- 비현직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근무기간이 정년퇴직 등으로 1년 미만인 학교 (신규임용 기준일로부터 1년)
- 기타 지명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의 판단이 있는 경우

5) 선정 제외 대상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4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포함), 성적조작]로 징계받은 자, 4대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징계기록이 정년내에 말소되지 않거나 말소 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 2022.1.1.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교원정책과-5224.2021.6.25.)
 - 음주운전은 2022.1.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 학내분규 및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확인 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

6) 행정사항

- 교장의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
-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법인에서는 사전에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 가급적 직무대리 임용기간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 교장의 경우 교육경력기준일(2월말) 현재 교장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거 “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신청가능

나. 교장 자격 인정 검정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별표 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2) 자격기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교장 자격연수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의 자격기준 중 초(중)등학교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 교장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별표 2]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고,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자로서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정한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계속 근무 가능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

구분	자격기준
초등·중등· 특수학교 교장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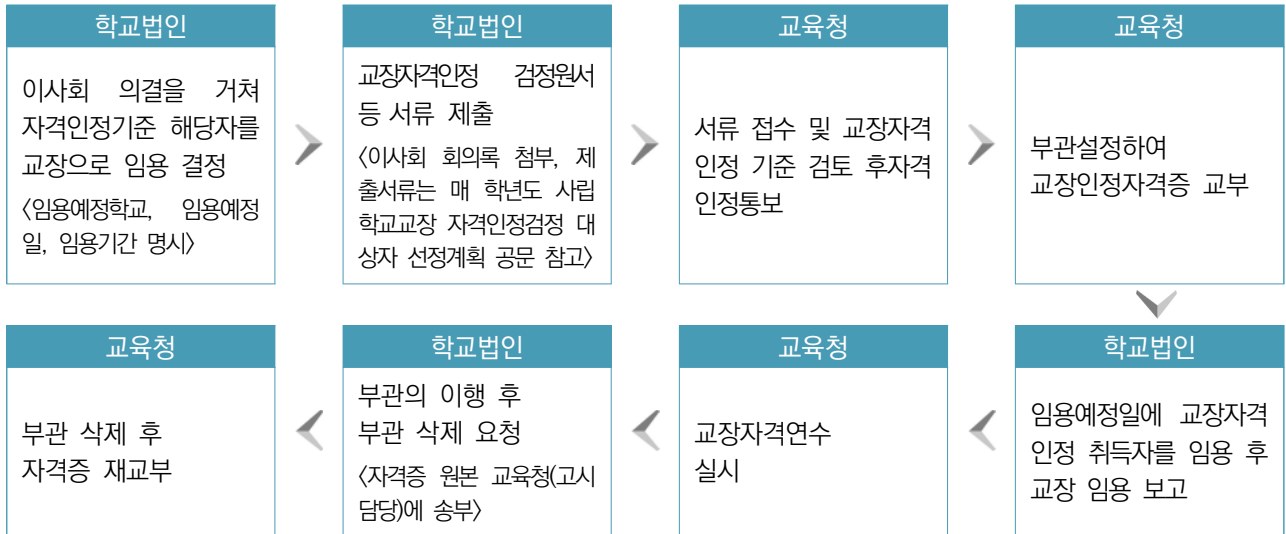
구분	자격인정기준
초등·중등· 특수학교 교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은 특수학교에만 해당됨

3) 신청 대상학교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로서 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 없는 학교

- 신청일 현재 교장의 공석 또는 직무대리를 임용한 학교
- 신청일 현재 학년도 말에 교장의 퇴직으로 공석이 예상되는 학교
- 차기 학년도 중에 교장의 임기만료 및 퇴직으로 공석이 예상되는 학교

4) 자격 인정 검정 절차



5) 교육(행정)경력 산정 시 참고 및 유의사항

-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경력은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경력만을 인정
- 교육경력이라 함은 소지한 해당 교원자격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해당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행정경력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므로 타 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 또는 사립학교 행정실 근무경력은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부관의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격인정을 취소함
- 자격인정 신청 시의 임용예정학교가 아닌 타 학교(또는 동일한 재단 소속 학교)에 임용되거나 중도에 전보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취소함
-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상관없이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취소함
-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연수를 이수하였으나, 기타 수여조건 미이행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다음 해 재차 자격인증에 의한 교원(장)자격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연수를 면제함

❖ 교장자격증 부관 표시(설정) 및 근거

-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2항,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 6개월 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2항,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교장자격연수 면제 대상자
 -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 일정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2항,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 계속 근무 조건 없는 대상
 - 박사학위 소지자
 -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자격구분	소지자격
특수학교 교장	1. 특수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 1년간 계속 근무조건 해당자

자격구분	소지자격
특수학교 교장	1.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초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유치원원장 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교장	1.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초등학교교장 자격증 소지자

- 3년간 계속 근무조건 해당자 : 1년간 계속근무조건 해당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7) 부관의 삭제 요청

- 교장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자격증의 수여 조건(부관)을 이행하였을 경우
부관 삭제 요청
 - 삭제 기관: 시·도교육감
 - 요청 시기: 교장 자격증 하단의 수여 조건(부관)을 이행 후 즉시
 - 삭제 요청 절차: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신청



제 2 절 교감의 임용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교원의 자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명)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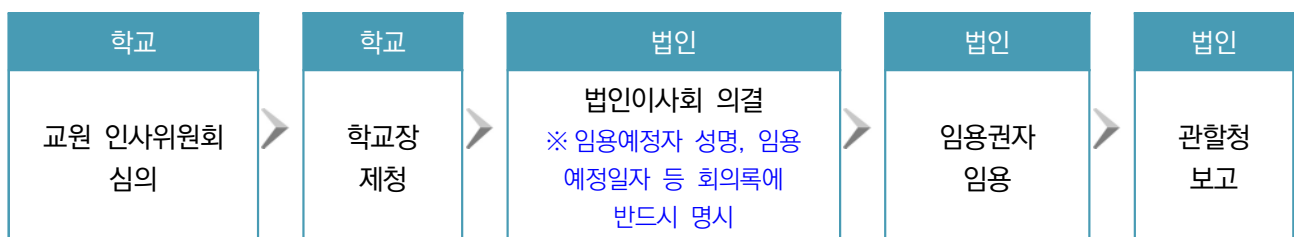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임용 절차

- 가. 교감은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임용하여야 함
- 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교감을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자는 이사회 회의록에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일 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 사립학교 교감의 임용절차는 교감연수대상자 추천부터 해당되며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시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회의록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라. 교감은 해당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해야 함



마. 자격기준

-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 중 중등·초등·특수학교 교감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

(교육경력 산출기준일 : 2월말)

학교급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중등 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 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 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제 3 절 교장(감)의 직무대리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임명 사유

- 교장(감)이 결원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차상위 직급자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케 하여 학교운영의 안정화를 기함

❖ 용어의 정의

- “직무대리”라 함은 교장(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교장(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사고”라 함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교장(감)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3

임명 원칙

- 가. 직무대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나.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 직무대리는 서열순에 의하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장(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임명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위에 임명

라. 교장이 휴가, 출장 또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 (단, 교감을 두지 아니한 학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
- 2) 직무대리 기간은 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휴가, 출장 또는 휴직 기간)으로 함

마. 전보, 퇴직, 해임, 면직 또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교장이 공석이 된 경우

- 1) (교장 복귀 불가능)해당학교 소속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 수행함. 단, 교장 자격연수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대상자를 직무대리자로 임용하고, 교감을 두지 아니한 학교는 해당학교 소속 부장 교사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임명함

참고 2개 이상의 학교(○○중, □□고)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 □□고 교장이 공석의 경우 동일 학교인 □□고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야 함 (○○중 교감을 □□고 교장 직무대리 임용 불가)

- 2) (교감 복귀 불가능)해당학교 소속 부장교사 중 교감 직무대리 임용. 단, 교감 자격연수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대상자를 직무대리자로 임용함
- 3)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경우, 교감 또는 교감 직무대리를 별도로 임명할 수 없음

바. 직무대리자 임명 시 7일 이내 교육청(관할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보고

4 임명 시 유의사항

가. 교장(감)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법인에서는 사전에 미리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연수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직무대리 임용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교장(감)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임용 시 인건비 지원 불가

- ※ 동일법인 소속 결원 대체 기간제를 통한 편법적인 수업 지원 금지
- ※ 교원의 정원은 직위별(교장·교감·교사)로 배정하고 있어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시간강사 포함)을 임용 할 경우 당초의 직위별 배정정원을 초과하게 됨

다. 직무대리를 임명할 경우 구체적인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할 것

참고 교사의 교장 직무대리 시 유의사항

- 교사를 교장직무대리자로 임용한 경우 등 교장 직무대리자 대체를 위한 기간제교원(시간강사 포함)의 임용은 인정되지 않고 인건비 지원도 불가함.

[사례] ○○고 교장 공석으로 인하여 ○○고 교사를 교장직무대리자로 임용한 경우

⇒ 교사 대체를 위한 기간제교사 임용 불가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 ○○고 교사는 본래의 업무(수업)과 교장직무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함



제 4 절 신규 교사 채용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9. 24., 시행 2022. 3. 25.〉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며 최종 확정시 변동 가능)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며 최종 확정시 변동 가능)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제3항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⑦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업무처리 흐름도



※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사립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제 시행 안내 공문 참조

3 교원 신규채용 사전준비

가. 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원칙

- 1) 학교법인은 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해당 교육청과 위탁할 필기시험 과목별 채용인원 또는 자체시험 승인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다.
- 2) 교원 신규채용 계획은 과·결원교사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과원 과목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신규 채용으로 과목별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원 신규채용 계획 필수 반영 사항

- 1) 교원 신규채용 계획은 **교원 정·현원 (과·결원교사) 현황, 전형일자 및 세부사항** (전형별 배점 및 가산점기준, 심사기준, 총 시험횟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총 시험단계의 횟수는 공고 이후에는 추가할 수 없음
- 2) 교원 신규채용 계획에는 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을 포함한다.
- 3) 전형 관계자에게 윤리·보안 확인·서약서를 징구한다.
- 4) 출제·채점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의 신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5)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형담당자로의 선임을 지양하고 그 지원을 인정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다. 이사회 의결 법정사항

- 1) 이사회가 의결하여 채용 절차를 확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2)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원 예정임을 인지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4 채용 공고

가. 공고방법 및 공고 법정 사항

- 1)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 2) 공고 명의를 사립학교장이 아닌 법인이사장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 3) 공고문에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 (결격사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나. 서류 요구 시 유의사항

- 1) 서류 요구 시 개인정보 노출수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2) 응시자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채용절차 종료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6항)
- 3)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2조)

다. 전형료 징수 불가

- 지방 노동청 허가 없이 전형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라. 공고문 내용 원칙적 변경 불가

- 1) 공고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고지
- 2)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시험장소, 선발예정인원 변경 등)

※ 채용 절차 등을 수정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재심의, 이사회 추가 의결(채용과목 및 인원수, 전형 절차 등 중요 사항) 등을 거쳐야 함

참고 ▶ 재공고와 변경공고

- 재공고: 최초 공고를 하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지원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경우
-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마. 공고문 필수 반영 사항

- 1) 구체적인 채용일정 및 절차
- 2) 원서접수 일정 및 접수 방법 (서면접수 외의 우편·인터넷 접수 방식도 제공)
- 3)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하여 해당 서류를 전형에 활용할 경우, 명확히 배점 명시
☞ 서류전형이 있을 경우 공고서에 배점이 명시되어야 하며, 별도 채점위원이 채점하여야 함
- 4)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자, 임용예정일자를 포함한 전형일정
- 5) 시험전형의 단계 수 (최종시험이 몇차시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 시험전형 단계 공고 후 추가 불가 (예시: 최종시험을 3차시험으로 공고 후, 4차시험 추가실시 불가))
- 6) 결정 준거가 되는 전형기준: 동점자 추가합격 여부 및 동점자 간 순위 결정기준, 채용예정자 (최종차수 합격자) 결격 시, 최종차수 차점자 합격절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법적가점기준 적용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8) 법령 상 필요한 고지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고지를 대체 ※ 예시 : 응시자 요구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9) 공고문을 사립학교 및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참고 채용 후 유의 사항

1.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일정기간(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내) 채용 서류 반환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서에 명시하고,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2. 문제지, 채점자료 보관
 - 문제지, 채점자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달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10년간 보관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학교별	자격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준교사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무용,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상업,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준교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초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5 지원서 접수

가.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1) 교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채용과목이 동일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4항)

참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특정 전공학과가 아니라는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불합격 처리 불가

-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업 능력을 갖추고, 인성과 자질이 뛰어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도록 전형계획 수립 시 수업실연이나 실기시험을 통하여 전공적합성을 판별하여야 함

- 2) 결격사유는 국·공립교원과 동일하다. (「사립학교법」 제52조)

나. 지원서에서 요구할 수 없는 정보

- 채용절차 중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조건과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전자 접수 장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7조)

-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 접수를 장려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2020. 12. 고용노동부)

6 출제 및 전형 준비

가. 출제위원 위촉 시부터 출제위원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철저

- 1) 내부위원 출제 시, 교내에서도 출제위원의 인적사항의 보안 유지 (교원 신규채용 계획에는 내부 선임 사실만 기재하고 인적사항은 별도 문서로 심의)
- 2) 외부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전형문제 출제를 경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형 후에도 출제위원의 인적사항 노출 가능성 최소화
- 3) 출제위원 유고,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교내 예비출제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출제위원의 인적사항의 보안을 유지

나. 출제본부(출제위원) 운영 보안계획 수립

- 1) 반드시 특정 장소에 격리 (출제위원과 응시자 접촉 차단)
- 2) 모든 출제위원은 입소일부터 종료시까지 출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경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제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출제본부의 모든 근무자는 전형이 끝날 때까지 외부 출입 금지
- 4) 합숙기간 중 복도 CCTV를 상시 가동하고 입·출입 확인
- 5)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용 신상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보안요원은 보안 근무일지에 기록
- 6) 격리된 출제구역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등 통화·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일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반납하며, 주 출입구·비상구에서 보안요원이 출입 여부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
- 7) 출제위원은 출제한 문제와, 출제·채점 항목 및 기준을 작성하여 전형 담당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업무 마무리
- 8) 출제·채점위원 검임 시에도 채점 항목 및 기준을 포함한 채점 자료 작성
- 9) 면접, 수업실연, 실기시험 등 자체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 출제위원이 출제함.
(면접 시 즉흥적인 시험문제로 평가 불가)

7

전형의 실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형의 종류

- 필기·실기·면접 등의 전형을 실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나. 전형 진행 시 행정·예산사항

- 1) 공고문에 규정한 것 (기존 심의 사항)과 다른 시험 운영 및 채점, 일정 변경 등을 할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재공고(또는 변경 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2) 법인회계로 전형비용을 집행하고 교비회계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및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다. 채점자료 보관

- 채점표 등 채점자료는 10년간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라. 면접관, 채점관 등의 평가위원 위촉

- 1) 전형(출제·채점) 담당자는 면접이나 실기시험 등 평가 시 출제위원이 작성한 채점항목 및 기준에 대해 채점 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 2) 평가위원 1명이 응시자를 부적격(또는 과락)으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위원은 반드시 부적격(또는 과락) 사유를 채점표 비고란 등에 명시.

마. 수업실연·면접·실기시험 채점 보안대책 수립

- 1) 필기시험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수업실연·면접·실기시험 출제위원은 시험일 당일 채점위원에게 평가기준에 대한 연수 실시
- 2) 교수·학습지도안의 경우, 답안지 상단에 수험번호가 아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채점
- 3) 면접 및 실기시험 채점은 평가 특성상 전형 종료 시 바로 채점표를 제출하고, 봉인절차 없이 바로 점수 합산 및 행정 절차 처리

8 적격심사

- 공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과 동일한 적격심사 실시
 - 결격사유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항)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
 - 채용신체검사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가.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확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명시

※ 응시 원서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첨부 동의 확보

(예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시험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시

(예시)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응시자격, 가산점 및 가점 확인, 시험 진행, 시험성적의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명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예시)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
- 시험 시행을 위한 응시자 확인
- 합격 및 성적조회 서비스 등 응시자 편의를 위해 이용

나. 전문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자체 필기전형 실시할 경우

- 1) 정보유출 방지,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한 업체 관리방안 마련
- 2) 공고서에 위탁에 관한 내역을 공고하여야 함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안내 후 동의 확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다. 차수별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공고

- 공고문에 명시한 방식대로 차수별, 최종 합격자 명단 공개

라. 경쟁률(응시자 현황) 공개

- 투명한 채용 과정을 위해 경쟁률(응시자 현황) 공개

마. 채용시험 성적

- 1) 채용시험 성적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원칙(「개인정보보호법」제4조)
- 2) 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은 개인정보이므로 성적 열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이 원칙
- 3)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가능(「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 다만,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님

“

제 4 장

복무·휴가

”



제1절 교원의 복무 및 청렴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7.13.)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21호, 2021.08.27.)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35호, 2018.11.9.)
- 「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제1항
- 「사립학교법」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으로 신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21.12.16.][법률 제18581호, 2021.12.16., 일부개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 12. 7.][법률 제18575호, 2021. 12. 7. 일부개정]

2

복무 일반

가. 복무의 의의

- 1) 복무: 교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
 - ※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사립학교법」제55조)
- 2) 복무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
 -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 규율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벌을 받게 됨.
 - 위반 내용에 따라 징계 별 이외의 제재가 병행 부과될 수 있음.

- ▶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 벌 부과(「국가공무원법」제84조)
- ▶ 무단결근: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면 봉급 일액을 삭감

나. 교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제20조)

- 1)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함.
-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함.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함.
-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함.
- 4)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함.

다. 교육공무원의 복무상의 의무

- 1) 직무상의 의무(「국가공무원법」제55조~61조):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 2) 신분상의 의무(「국가공무원법」제62조~66조):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외국 정부의 영예 제한

라. 학기 중 복무

- 1) 출·퇴근 등 근무시간 준수 철저.
- 2)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처리 금지.
- 3) 교내 근무 장소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 내 모든 근무자의 복무규정 준수.
- 4)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불가함.
- 5) 학생 인솔 시 인솔 교원 복무 규정 준수(사제동행, 입장 지도 철저)
- 6) 토요일무일 근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개인별 초과근무를 허가할 수 있음.
- 7) 교사가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8)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1)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2)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함.
- 3) 아울러,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해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부서(기관)별로 근무상황부에 의한 일괄 신청 및 일괄 승인처리도 가능함(근무상황부의 기재사항은 NEIS 기재사항과 동일)
- 4) 방학 중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하되,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무회의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함.
- 5) 방학 중 휴가나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시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 활동이나 교육 관련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교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시간외 근무

가. 교원의 근무시간

- 1)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됨(급식지원 및 학생 생활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임)
- 2)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개인별 또는 일부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단, 영양교사는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4168(2016.7.21.))
 ※ 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학사운영, 방역관리 등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교원 개별 시차출퇴근 가능.

나. 근무일

- 1) 근무일: 수업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휴업일
- 2) 휴무일: 교사 근무일이 아님(공휴일, 토요일, 휴교일)
- 3) 수업일과 휴업일은 학생수업여부로 구분
- 4) 공휴일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 5) 토요일 휴무일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9조

다. 근무시간외 근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1)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자율학습지도
 -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생활교육
 - 학사 사무처리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 시간외 근무자 및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4)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분과 합산해 산정.
 ※ 정액분 지급: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 명령 없이 월 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동 지침Ⅶ-6-다)
- 5) 조기 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인정.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6)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1.6.7.)

4 출장, 휴업, 휴교

가. 출장의 정의

- 1)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2)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 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함.

❖ 출장조치 불가 사례

- ①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② 기관장 아·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③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20조제9항)
- ④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⑤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

❖ 출장조치 가능 사례

- ①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 가능
- ②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 기관의 경우도 동일)
- ③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④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⑤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나. 출장 교원의 의무

- 1)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복무규정 제6조제1항)
- 2) 출장공무원은 명령받은 출장 기간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2항)
- 3)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4항)
- 4)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3항)
- 5)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함.
- 6)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6조제5항)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임신 주수, 출장지역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함.

- ①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유산·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③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 산간 벽지 등)으로의 출장의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명할 수 있음.

다. 출장과 초과근무

- 1)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2)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라.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 1)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2)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마. 휴업 결정

1) 휴업 실시 절차

• 관할청의 휴업 명령

-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함.

• 학교장의 휴업 결정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 학교의 장이 비상 재해·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실시함.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바. 휴업과 복무

- 1)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 학교의 이른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3)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 4) 복무 지도 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사. 휴교와 복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1) 휴교 명령: 관할청

2) 사유

- 학교의 장이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4) 교원의 복무: 휴교 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외부강의

가. 교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 영리업무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와 금지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21호(2021.8.27.)) 참조.

2) 겸직허가

•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

• 교원의 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 허가사항(학교장 제외)이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의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기 바람.

-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6.15.).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6.14.까지로 함.

• (결과 통보) 학교장은 공문(내부결재)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

-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준수사항: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21호(2021.8.27.)) 참조

3) 겸직허가의 취소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제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교원의 과외 교습 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됨.
- 제22조(벌칙)제2항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참고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영역

콘텐츠 목적	인터넷 플랫폼	
	개인 계정	공공 계정
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수업 외 직무 관련		
학교(유치원) 수업용(공개 범위 제한)		업무 관련 활동

• 준수할 사항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6) 겸직허가

- 겸직 허가 대상
 -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
 -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예)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예)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겸직 허가권자: 학교장
- 겸직 허가기준
 - 학교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¹⁾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학교장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 절차
 - (신청) 학교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신청 참고

- ①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 증빙서류: 개인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 화면 캡처 등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술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②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③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교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심사) 학교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검토

1) 준수할 사항: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의 성격, 수익, 담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심사
-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학교장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내부 결재를 하여 보관.
 - (결과통보) 학교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
 - 통보 시 허가 여부, 허가 기간 등 심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
 -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 실태조사 및 관리상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시·도교육감이 겸직 실태조사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도 포함.
- 점검 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학교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요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겸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 등을 통해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초상권 침해, 유아·학생 정보 노출, 직무 전념 저해 등 동 지침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

나. 외부강의

1) 외부강의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 불가.

2)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 교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은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국·공립대학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서면 자문, 서면 고문, 서면 심사, 서면 평가 등의 경우도 신고 대상임.

- 겸직허가, 출장, 연가 등의 복무관리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외부강의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단,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해 월 3회 이내로 제한.

6 청렴

가. 청렴 의무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일부개정공포 2021.9.24., 시행 2022.3.25.)

- 1) 정관 내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항 신설 의무화
 -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 부과,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2)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9. 24.>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10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 2 절 교원휴가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6.1.)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21호, 2021.8.27.)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2018.11.9.)

2 휴가 일반

가. 휴가의 구분

- 교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함.

나. 휴가의 종류

-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3)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다. 일반원칙

-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3)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함.
- 4)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5)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함(연가는 제외)
- 6)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공무원보수규정 27조-보급일액 삭감)

라. 허가권자 및 절차

- 1) 교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 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 할 수 있음.

- 2)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3 연가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	-

나. 일반원칙

- 1)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 할 수 없음.
- 2)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3)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4)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계·동계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5)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 ①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②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③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⑥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⑦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⑧ 본인 자녀의 입영일
- ⑨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7) 반일연가는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단위학교의 근무시간에 따라 이를 1/2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함.

8)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다. 다음 연도 연가 사용

1) 교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단, 다음 연도 전 기간(1~12월)을 근무할 경우 적용함.

재직기간	미리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4년 이상	10일

3)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4)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함.

$$\text{시간선택제 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text{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하루(日)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①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 6.30.에 일반직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②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③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④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⑤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⑥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⑦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⑧ 대기발령(직위해제)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⑨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마. 연가 가산

-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함.
 -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 교원에게는 '연가의 저축', '연가보상비', '연가 사용의 권장'이 적용되지 않음.

4

병가

가. 일반 병가

- 1)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2) 나이스 시스템 상 매년 6.30.기준으로 이 날에 걸쳐 병가 신청하는 경우 2회에 나누어 승인 처리.

나. 직무상(공무상) 병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 1)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2) 일반병가 60일의 사용 일수와는 별도로 계산함.

- 3) 직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직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 단, 직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 4) 직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직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직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직무상 병가로 처리함.
- 6)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 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직무상 병가로 처리함.
 - ※ 승인받은 직무상 요양기간이 일반 병가·연가 및 직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직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 요양승인의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해 직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사학연금공단 요양급여 신청 절차

직무상 요양승인	청구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교기관에 제출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응급, 초진)사본
확인·이송	학교장	◦상병경위 조사 및 신청서 등 공단 이송 - 직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발생 관련 입증자료 첨부
심사·결정 급여지급	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직무상 재해여부 심의) ◦급여결정 및 통보 : 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다. 병가의 운영방법

- 1)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2)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 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같음.

3) 일반병가와 직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직무상 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연가(연가가능기간 산출) → 휴직 조치

※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4)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의사 진단서 관련

- 1)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함. 국가공무원법 제71제1항에 의거 질병휴직시 입증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으며, 이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함.
- 2)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 3)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나 '확인서'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 4)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5)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가

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 12)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같은 법 제5조의 2제1항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나.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1) 공가의 승인대상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2) 원격시간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3) 수검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검진, 확진검사 등)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4)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5)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다. 공가의 사례

- 1)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함.
- 2)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3)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4)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에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취급함이 타당함.

6 특별 휴가

가. 교원의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토요일 /공휴일 산입여부	
경조 사 휴 가	결혼	본인	5	×	
		자녀	1	×	
	출산	배우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면 기관장 반드시 승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10	×	
	입양휴가	본인	20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 전후 ※ 출산 전 45일(60일) 초과 금지 ※ 유·사산휴가 일수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가능)	90(120)	○	
난임치료시술 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	1일	×	
여성보건휴가		여자공무원 생리기간	월 1일	×	
육아시간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남성 교원도 가능, 동일자녀 남녀교원 동시 가능)	1일 (2시간)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연가일수 초과한 출석수업 기간		×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교원 및 재해구호 봉사활동 참여 교원	5일 이내	×	
가족돌봄휴가		[유급]자녀돌봄: 1자녀(2일), 2자녀(3일) [무급]가족돌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일수	연간10일	×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	
교원침해관련 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 지원	5일 이내	×	

나. 경조사휴가

- 1)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함.
- 2)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3)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4)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토요일 부모 사망] 다음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음.

[토요일 자녀 결혼]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음.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 출산휴가

-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 출산일 당일을 제외한이후 날로부터임.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여성 공무원은 병가 및 출산휴가 신청 가능.

- 3)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임신기간		휴가일수	비고
주 수	일 수		
15주 이내	105일 이내	10일	유산, 사산할 날부터 휴가 부여
16주 이상~21주 이내	106일~147일	30일	
22주 이상~27주 이내	148일~189일	60일	
28주 이상	190일 이후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교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라. 난임치료 시술 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마. 여성보건휴가

- 여성교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음.

바. 모성보호시간

- 1)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 하루(日) 8시간 근무 기준

-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 3) 승인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4)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사. 육아시간

-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 일(日) 8시간 근무 기준

- ▶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 ▶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3)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아. 수업휴가

-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자. 재해구호휴가

- 1)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2)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차. 가족돌봄휴가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①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②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③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아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카. 임신검진휴가

- 1)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2)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3)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4)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5)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6) 학교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 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교육부)

□ 교원의 휴업일·수업일 연가 사용

- ⇒ (휴업일 중 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사유를 미기재하고 NEIS 결재를 받음. 관리자는 교원 개인 정보 보호 및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사유 확인 불요.
- ⇒ (수업일 중 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사유를 미기재하고 NEIS 결재를 받되, 학교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결재.
- ※ 복무 관련 NEIS 결재 시 구두보고 또는 NEIS외 별도 사전결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사전에 구두보고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조퇴·외출·지각 사유 기재는 사생활 침해

- ⇒ (회신 요지)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 육아시간 사용에 있어 학교장 권한 남용

- ⇒ (회신 요지)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따른 학교장 승인 사항임.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 병가, 연가 모두 사용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관련 질의

- ⇒ (회신 요지) 연가 미리쓰기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무승인권자는 다음 연도 휴직, 퇴직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 필요.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 필요.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질병휴직이 원칙임.

□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실시 기준

- ⇒ (회신 요지) 교권 침해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교권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 학교장이 아닌 자의 조퇴·외출·지각 등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

- ⇒ (회신 요지)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 허가권자가 교감일 경우 전결 가능.

참고 2

〈교원휴가 예규〉 시도교육청 주요 질의회신 사례(교육부)

연번	조항 / 질의 요지	회신 내용
1	제5조(연가) ③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사유 또는 용무란에 연가 사유는 미기재 하나, 수업일 중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사유 또는 용무란 미기재 관련	
2	제8조(특별휴가)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활용가능하며, 보건의료의 경우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 활용 가능함.
	육아시간 활용의 어려움	
43	제5조(연가) ③항	연가는 연가 사유가 있을 경우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 실시 전 NEIS를 통한 결재가 원칙임. 다만, 나이스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임. 연가로 인한 미출근 시 해당 교원과 학교장은 대체인력 확보, 수업교한 등을 통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연가는 사유 미기재, 지각, 조퇴 등은 사유 기재는 불합리	
4	제5조(연가) ③항	조퇴, 외출, 지참의 경우 사유 기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근무상황신청 시 간단한 사유 기재로 같음할 수 있음. 단, 사유 미기재는 불가함.
	조퇴, 외출, 지참의 경우 사유기재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 있음	
5	제8조(특별휴가) ①항	교권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교권침해보호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 여부 모호	
6	제8조(특별휴가) ②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기준(만 5세 이하, 1일 2시간, 24개월 범위)을 위반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으며, 자체기준 마련은 의무가 아니라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육아시간 자체기준의 범위와 한계 모호	
7	제5조 3항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 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파악을 위해 ‘공무외국외여행’임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국외 여행 시 사유 미기재 여부	
8	제5조 3항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단, 구체적인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함.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여부	
9	제5조 3항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한 전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임.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임 전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연번	조항 / 질의 요지	회신 내용
10	제8조(특별휴가) ②항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육아시간 자체기준의 범위와 한계 모호	
11	제5조(연가) ⑤항	연가를 미리 쓰는 것의 적용대상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 근무해야 하며 이를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퇴직여부 및 휴직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야 함.
	연가 미리쓰기 적용 대상 및 사용 사유	
12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항	수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함.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을 비롯한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연가 사용 시 수업일을 제외한 날의 구체적 의미	
13	제5조(연가) ③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근무상황부 기재 방법에 따라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지각, 조퇴 등은 사유 기재 방법	
14	제8조(특별휴가) ①항	교권 침해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다만 교권침해로 인한 특별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자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등으로 근거자료가 필요함.
	교권 침해 교원 지원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방침 불분명	
15	제5조(연가) ③항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의 지각·조퇴·외출의 승인권자가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해당 복무가 교감 전결일 경우, 전결 가능.
	지각·조퇴·외출의 승인을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처리해도 되는지	
16	제5조(연가) ⑤항	연가 미리쓰기는 차년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 근무한다는 전제하는 것이므로 퇴직 예정자와 휴직 예정자는 제외 대상임. 연가 미리쓰기 사유는 동 조항 ①항의 사유와 같음.
	연가 미리쓰기 적용 대상 및 사용 사유	
17	제5조(연가) ①항	학교장이 수업일 중에 연가 사유라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임.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18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항	연가는 휴업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퇴직 예정자의 '퇴직 후 적응 준비'를 위한 연가 사용 가능여부	

제 5 장

휴복직, 면직, 퇴직



제 1 절 휴직제도의 개요 및 일반사항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3의2(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9조(휴직의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금액)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2 휴직 및 복직 일반

가. 휴직의 의의

- 사립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4호 및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의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나. 휴직의 종류

1) 휴직의 종류(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구분	휴직종류	휴직요건	휴직기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1호	질병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함	1년(1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공무원 질병휴직: 3년
2호	병역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정관으로 정함	복무기간
3호	생사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3개월 이내
4호	법정의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정관으로 정함	복무기간
5호	유학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하게 된 때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3년 이내(학위취득 목적인 경우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6호	고용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 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정관으로 정함	고용기간
7호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때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당 3년 이내 (근속기간 산입)	자녀 1명당 3년 이내
7호 의2	입양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근속기간 산입)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8호	연수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3년 이내
9호	가사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10호	동반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된 때 배우자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근무(연수 등)기간3년 이내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11호	노조전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
12호	자율연수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기간 10년이상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재직기간)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정관으로 정함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13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관으로 정함	해당없음

2) 교육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구분	휴직종류	승급기간 산입	경력평정	봉급 및 수당	
				봉급지급	수당 등
1호	질병휴직	승급제한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미산입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1~2년 봉급 5할 지급 (공무상 질병 전액 지급)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2호	병역휴직	승급인정	산입	미지급	미지급
3호	생사불명	승급제한	미산입	미지급	미지급
4호	법정의무 수행	승급인정	산입	미지급	미지급
5호	유학휴직	승급인정	5할 산입	봉급 50% 지급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6호	고용휴직	승급인정 (비상근 5할 산입)	산입 (상근 10할 비상근 5할)	미지급	미지급
7호	육아휴직	승급인정 (첫째, 둘째 자녀 1년 이내 기간, 셋째자녀 이후 휴직 전기간)	산입	미지급	0~3개월 : 봉급액 80%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12개월 : 봉급액 50% 지급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7호 의2	입양휴직	승급인정	산입	미지급	미지급
7호의 3	불임·난임 휴직	승급제한	제외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1~2년 봉급 5할 지급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8호	연수휴직	승급제한 (단, 학위취득 시 인정)	5할 산입	미지급	미지급
9호	가사휴직	승급제한	제외	미지급	미지급
10호	동반휴직	승급제한	제외	미지급	미지급
11호	노조전임자	승급인정	산입	미지급	미지급
12호	자율연수 휴직	승급제한	제외	미지급	미지급

다. 휴직의 기간, 효력(사립학교법 제59조 제4항)

- 1) 사립교원에 대한 휴직의 기간, 효력 및 복직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를 참조하여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2) 학교법인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관 등의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함.

참고 휴직의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등)

-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검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처분도 가능함.

라. 휴직의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 1)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조치
- 2)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참고 휴직 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 휴직 중 학업 중단 등) 즉시 복귀신청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귀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마.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1)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 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2)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 3)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의 휴직기간으로 봄.
- 4)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5)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

참고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다만,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6) 복직자에 대한 연수 실시

참고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육야휴직) 또는 제10호(동반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복직자에 대한 연수]

바. 휴직의 연장[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 1) 휴직 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 휴직 신청
- 2)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정관에 명시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사. 휴직자의 복무관리[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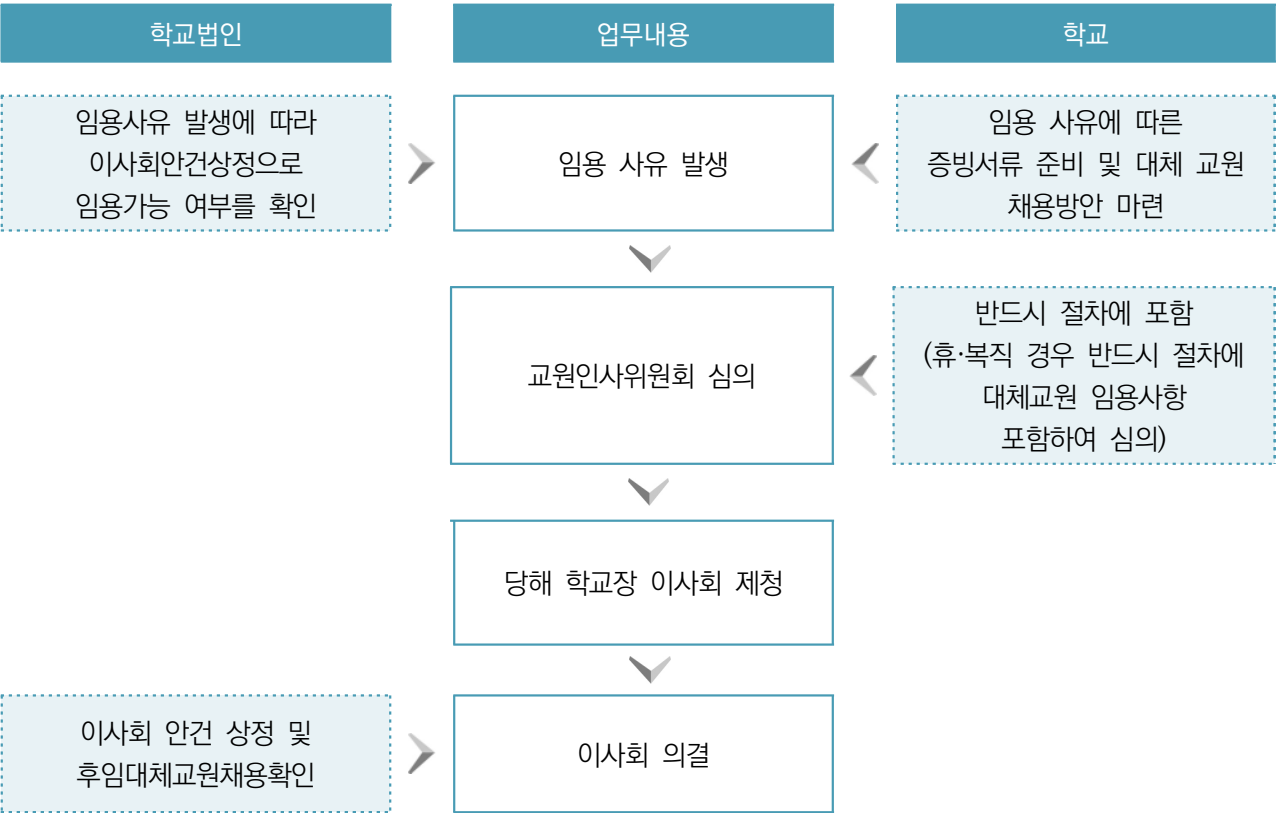
- 1)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함.
- 2) 휴직의 목적외 사용 금지
- 3) 휴직 전 휴직자 복무관리 사전교육
- 4) 휴직 중 휴직자 복무 관리 철저
- 5) 휴직자는 반기별 복무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
- 6) 학교에서는 휴직 교원 점검카드를 비치하여 휴직자 관리

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3 휴·복직 업무 흐름도





제 2 절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

휴직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르며, 아래 휴직 종류별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명시된 기간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인 정관으로 정함.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국가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및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1.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항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항 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항 12호의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 ③ 다.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2 질병휴직

가. 사유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나. 휴직의 기간(연장 및 재휴직)

- 1) 기간: 1년, 부득이한 경우는 1년 연장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 2)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 가능
- 3)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가능.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
- 4)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 가능

다.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휴직기간(연장 포함)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 부여 가능
-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면직함이 타당함.

라.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3. 학교장 의견서 1부 4. 서약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휴직연장	1. 휴직연장원 1부 2. 진단서 1부 3. 서약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불임·난임: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
복직	1. 복직원 1부 2. 진단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정기승급 처리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참고 질병 휴직 중 복직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

마.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 1) 일반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질병휴직(1년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
- 2)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3년)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미산입(단, 공무상질병인 경우 포함)
- 2) 호봉승급: 미산입(단, 공무상질병인 경우 포함)

사.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1) 봉급
 - 일반질병: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할 지급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지급
 - 공무상질병: 봉급액 전액 지급
- 2) 수당: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공무원보수규정 확인)

아.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신청 및 조사 관련 공·사립 비교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신청 및 조사 관련 비교			
		공립	사립
1	요양급여 신청자	개인(공무원등)	학교기관의 장(학교장)
2	상병경위 조사	공무원 연금 공단	학교기관의 장
3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인사혁신처	사학연금공단

2 병역휴직

가. 사유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나. 휴직기간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참고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 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 군 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도록 하여 이를 보완함.
- 입영준비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

다.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 1부 3. 서약서 1부	먼저 휴직 처분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첨부 가능
복직	1. 복직원 1부 2. 전역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 전역(소집해제)증, 주민등록초본 등 • 귀향자 지체 없이 복직 • 군무이탈자 -- 직권면직도 가능

라.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

마.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3 생사불명

가. 사유

-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참고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교원의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 하여야 함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3월 이내
- 2) 휴직발령기준일: 당해 교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4) 휴직처리 후 3월 이내에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 5)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금지 조항과의 관계

참고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금지 조항과의 관계

-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다.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휴직	1. 사유입증서류 1부 (학교장 의견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휴직발령일: 인지 또는 실종신고일 • 3월 이내 복귀 불가 시 직권면직
복직	1. 복직원 1부 2. 복귀신고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라.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미산입
- 2) 호봉승급: 미산입

마.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4

법정의무수행

가. 사유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 2) 휴직 발령 기준일: 병역휴직과 동일
- 3) 횟수: 병역의무와 동일

다.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휴직	1. 휴직 신청서 1부 2. 사유증명서 1부	사유증명서: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직	1. 복직원 1부 2. 관련 증빙서류 1부 3. 호봉획정표 1부	

라.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

마.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 지급
- 2)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5 유학휴직

가. 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나. 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2)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참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 (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참고 국비유학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참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라.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1)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6월 또는 1년 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 2)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 가능

마.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고, 유 학기간의 1/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 유학휴직 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 매학기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공히 국문번역서 1부 포함)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

바. 신청서류

휴직 시	휴직연장 시	복직 시
1. 휴직원 1부 2. 입학허가서 1부(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부 3. 유학계획서 1부(서식3)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인증 시험성적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7. 출입국 증빙서류(VISA 사본 등)	1. 휴직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1부 3. 성적증명서(공관확인) 및 번역문(공증) 1부 4. 수학연장기간이 명시된 대학 발급 확인서 5. 학교장 추천서 1부 6. 서약서 1부	1. 복직원 1부 2. 학위 취득시: 학위증명서 (공관확인, 공증번역필) 학위 미취득시: 성적증명서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유학 결과물 1부(성적증명서 포함)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50%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

아. 보수

- 1) 봉급: 50% 지급(3년 이내)
- 2) 수당: 수당 규정의 의하여 지급(공무원보수규정)

6

고용휴직

가. 사유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참고 대상기관별 휴직 사유

-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이 아닌 일반 지원부서(예산·기획·감사·인사 등)에서의 근무를 위한 휴직은 제외됨.
-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국위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휴직의 범위

- 1) 국제기구의 범위: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 2)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함.
- 3)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연구기관
- 4)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 5)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3)

참고 고용의 의미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고용기간

- 2) 휴직의 신청: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라. 신청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참고 휴직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휴직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휴·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휴직시): 고용기간,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복직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비상근의 경우 50%)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비상근의 경우 50%)

참고 상근근무와 비상근근무의 구별 기준

- 상근근무: 주당수업시수 15시간 이상 수업 또는 주 40시간(당해 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근무: 주당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수업
- 기타: 주당수업시수 5시간 이하의 휴직사유 불인정

참고 상근 및 비상근근무에 따른 호봉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함.

바.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7

육아휴직

가. 사유

-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2) 부부 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 3)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나. 자녀의 범위(친생자 및 양자 포함)

- 1)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2)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2)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 가능
- 3) 취학 학년으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4)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시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 휴직의 횟수: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의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라.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마. 휴직사유 입증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4)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
- 5)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출산휴가와와의 관계

- 여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둘 이상의 자녀 120일)의 출산휴가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 가능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산입(첫째, 둘째의 경우 1년, 셋째부터 경우 휴직기간 전부 산입)

사.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30일 이상 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참고 부부가 육아휴직 시 수당 지급

부부교원(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참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원(공무원)인 경우 그 (교원)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수당은 부부교원(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함.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공문 비고란에 아빠의 달을 명시하고, 동일자녀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함
 - 배우자가 공무원일 때: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첨부
 - 배우자가 근로자일 때: 사업장 또는 관할고용지원센터의 육아휴직 입증서류 첨부
- 휴직허가 시 동일 자녀에 대한 휴직여부를 확인하고, NEIS 처리 시 '아빠의달 육아휴직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8 입양휴직

가. 사유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를 입양하는 때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6월 이내
- 2) 휴직의 횟수: 입양 아동 1명당 1회

다. 휴직신청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육아휴직과의 관계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만 8세 초과하는 경우에 입양휴직 가능

라.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 | |
|---------------------|---------------------|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 |
|---------------------|---------------------|

마. 보수

- | | |
|-------------|-------------|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
|-------------|-------------|

9

연수휴직

가. 사유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3년 이내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
- 3)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가능
- 4)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 사정,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다.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라. 휴직사유 입증서류

- 1)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 등
- 2)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시 유의 사항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조기학위취득 또는 연수목적 달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2)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또는 연수 수료증명서 등)를 제출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50% 산입
- 2) 호봉승급: 미산입(단, 상위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함)

사.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참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 5. 20.)]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
 - 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 마.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 ※ ‘마’항에 해당되는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10 가사휴직

가. 사유

-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위하여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2)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나. 휴직의 조건

- 1) 대상: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교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간호대상자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교원에게 간호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교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임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등이 연로하거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다. 휴직기간

- 1) 법정휴직기간: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
- 2)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3)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가사휴직을 하여야 함.

라.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 신청 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시 유의사항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미산입
- 2) 호봉승급: 미산입

아.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2) 수당: 지급안함

11 동반휴직

가. 사유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
-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참고 동반휴직을 허가할 때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 결정

다. 휴직 신청 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라. 복직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미산입 2) 호봉승급: 미산입

바.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2) 수당: 지급안함

12 노조전임자휴직

가. 사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나.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전임기간
- 2) 휴직의 신청: 휴직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허가신청서로 봄)

다. 휴직신청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은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휴직기간 전부 산입
-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전부 산입

마.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13

자율연수휴직

가. 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또는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때

나. 휴직의 요건

- 1) 휴직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2)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 3) 유의사항: 교원 수급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2) 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3)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라. 휴직신청서류

-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1) 경력평정: 미산입
- 2) 호봉승급: 미산입

바. 보수

- 1) 봉급: 지급안함
- 2) 수당: 지급안함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학교		
2. 직 급	교사		
3. 성 명(생년월일)	000 (0000년 00월 0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0000.00.00.~0000.00.00.(1년)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 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 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임 용 권 자)

귀하



휴직 교원 점검 카드

1. 소 속	○○○○학교		
2. 직 위	교사		
3. 성 명(생년월일)	000 (0000년 00월 0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0000.00.00.~0000.00.00.(1년)		
6. 주소			
7. 연락처			
확인일시 (년월일)	확인내용	조치사항	확인자
2021.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휴직의 목적에 맞도록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해외 체류 해당사항 없음- 휴직자 복무상황 확인결과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	없음	전결규정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

※

휴·복직 관련 제출서류

사유	구분	제출서류	참 고 사 항
1호 (질병)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3. 학교장 의견서 1부 4. 서약서 1부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진단서 1부 3. 서약서 1부	※ 최초 휴직이 2년 미만의 기간일 때
	복직	1. 복직원 1부 2. 진단서 1부 3. 호봉확정표 1부	※ 진단서: '정상근무 지장없음' 포함
2호 (병역)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 1부 3. 서약서 1부	※ 사후 입대증명, 군복무확인서 첨부 가능
	복직	1. 복직원 1부 2. 전역증명 1부 3. 호봉확정표 1부	※ 전역(소집해제)증, 주민등록초본 등 ※ 귀향자 지체없이 복직 ※ 군무이탈자--직권면직 가능
3호 (행불)	휴직	1. 생사불명 관련 학교장 의견서 1부	※ 생사불명, 소재불명 사유(3월 이내) ※ 휴직발령일: 인지 또는 실종신고일
	복직	1. 복직원 1부 2. 복귀신고서 1부 3. 호봉확정표 1부	※ 사유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잠적'도 사유에 포함(이 경우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8조)
4호 (의무)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사유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 사유증명서: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직	1. 복직원 1부 2. 관련증빙서 1부 3. 호봉확정표 1부	

사유	구분	제출서류	참 고 사 항
5호 (유학)	휴직	1. 휴직 승인신청서 1부 2. 입학허가서 및번역문 1부 3. 유학계획서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성적 증명서 1부 6. 유학휴직 서약서 1부 7. 출입국 증빙서류 1부(visa 사본 등)	※ 교육실경력 3년 이상 ※ 입학허가서: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공증본, 수학기간 명시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수학연장기간확인서 1부 5. 학교장추천서 1부 6. 서약서 1부	※ 재학·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공증본
	복직	1. 복직원 1부 2. 학위취득시:학위증명서 학위미취득시: 성적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 1부 4. 유학결과물 5. 호봉확정표 1부	※ 학위, 수료증, 학적증명:아포스티유 또는 재외 공관 확인 ※ 증빙서류는 번역공증본 제출
6호 (고용)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고용계약서 1부 3. 서약서 1부 4. 출입국사실 증명서	※ 계약서: 아포스티유 혹은 재외공관확인필, 주당수업시수 및 보수지급 예정액반드시 명시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고용연장확인서 1부 3. 서약서 1부	※ 고용계약기간 임의 변경 불가(징계사유)
	복직	1. 복직원 1부 2. 계약만료증빙서(경력증명서) 1부 3. 출입국사실증명 1부 4. 호봉확정표 1부 5. 보수지급 확인 증명서 6.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 공관 확인,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

사유	구분	제출서류	참 고 사 항
7호 (육아)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 부부교원 모두 가능 ※ 산전의 경우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 2년 이상 휴직자 연수이수증 첨부
7호의2 (입양)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입양사실 확인 서류 4. 서약서 1부	※ 부부교원 모두 가능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7호의3 (불임·난임)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불임·난임사실 확인서류(진단서) 3. 서약서 1부	※ 사립학교는 질병휴직에 해당
	복직	1. 복직원 1부 2.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3. 호봉획정표 1부	※ 복직 시 불임·난임시술기관의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제출
8호 (연수)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입학허가서 1부 3. 서약서 1부	※ 재학증명, 합격증명도 가능 ※ 담당과목 관련전공만 가능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서약서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학위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 학위미취득 시 수료 증명

사유	구분	제출서류	참 고 사 항
9호 (가사)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간호대상자 진단서 1부 3.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4. 서약서 1부	※ 1회 1년 이내, 재직 중 총 3년 ※ 진단서 : 간호대상자의 치료기간명시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진단서 1부	※ 1년 이상일 경우 복직 후 재휴직
	복직	1. 복직원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 휴직사유와 무관하게 복직 가능
10호 (동반)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3. 배우자의 해외근무확인서 1부 4. 서약서 1부 5.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재직증명/유학증명/ 인사발령통지서: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공증본(영문 서류)
	연장	1. 휴직 연장원 1부 2. 재직/재학증명 1부 3. 가족관계확인용 증명서 1부	※ 재직/재학증명 : 아포스티유 혹은 재외 공관 확인, 번역공증본
	복직	1. 복직원 1부 2. 재직/유학만료 확인 증빙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출입국사실증명 1부 5. 호봉획정표 1부	※ 2년 이상 휴직자 연수이수증 첨부
11호 (노조 전임)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 관련 문서 첨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호봉획정표 1부	
12호 (자율 연수)	휴직	1. 휴직신청서 1부 2. 자율연수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 재직기간 중 1회 1년 이내 학기 단위 허가
	연장	휴직 연장원 1부	
	복직	1. 복직원 1부 2. 호봉획정표 1부	



제 3 절 면직

1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2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가.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나.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예외임.

다.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라. 교원은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면직의 사유

가. 관련근거: 「사립학교법」제58조(면직의 사유)

나. 면직의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면직의 종류(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사망)

가. 의원면직

- 1)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교원지위를 소멸시키는 것
 - 2) 면직 절차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이사회의 의결)가 되어야 면직처리
 - 3) 면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원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복무 관리에 유의
 - 4) 임용제청권자(학교장)는 재직 중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①, ③, ④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 ①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②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 ③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④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⑤ 의원면직 제청 시 제출서류(학교장 → 학교법인)
 - 사직원, 서약서, 학교장확인서, 비위사실확인조회결과(의원면직제한대상여부조회) 각1부.
- ※ 감사원 지적사례(교과부 감사총괄담당관-3823, 2012.8.20.): 의원면직 제청 시 의원면직대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를 경찰청, 검찰청,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지 않고 의원면직처리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직권면직

- 1) 직권면직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시키는 것.
- 2) 직권면직 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
|---|

- 3) 2~6의 사유에 의한 직권면직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 남용을 방지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다. 징계면직

- 1) 징계면직이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해임을 시키는 경우
- 2) 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을 제한 받음

라. 사망

- 1) 사망자 면직 일자: 사망 다음날(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2항)
- 2) 사망자의 보고: 발생 7일 이내 학교장이 임용권자(학교법인)에게 보고로서 처리완료(이사회 미 실시)

4 면직 절차



- 학교장은 사직원(의원면직에 한함)과 확인서를 첨부, 임용권자에게 제청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학교(재단)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행함.
- 임용제청권자(학교장)는 재직 중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함.
- 의원면직의 경우에 있어서 교원들이 학기 중에 사직원 제출로 인하여 면직처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가급적 2월말과 8월말을 기준으로 면직 처리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제 4 절 퇴직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 퇴직의 사유)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2

당연퇴직

가. 당연퇴직이란 임용된 것을 취소하는 것(즉,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나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나. 당연퇴직의 사유

- 1) 임기로 임명된 자가 임기 만료되었을 때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처리 절차

- 1) 당연퇴직은 임용된 것을 취소하는 것(즉,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나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 2) 임용 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당연 무효로 당초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당연 무효의 통지·확인 성격)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 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 3)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조치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발령 조치
- 4) 근무기간 중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정년퇴직

- 가. 「사립학교법」에는 사립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 학교법인 정관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나.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만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 다. 정년퇴직일: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31일,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 해 2월 말일로 함
- 라. 정년퇴직자의 신분유지: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
- 마. 직위해제 중인 자의 정년: 직위해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에 정년퇴직

4 명예퇴직

- 가.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 60조의3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나. 명예퇴직이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 다. 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만62세로 봄.
 ※ 단, 법인 정관에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라.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은 학교법인정관에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함.
- 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에 의함.

제 6 장

전보·파견, 자격



제 1 절 전보·파견·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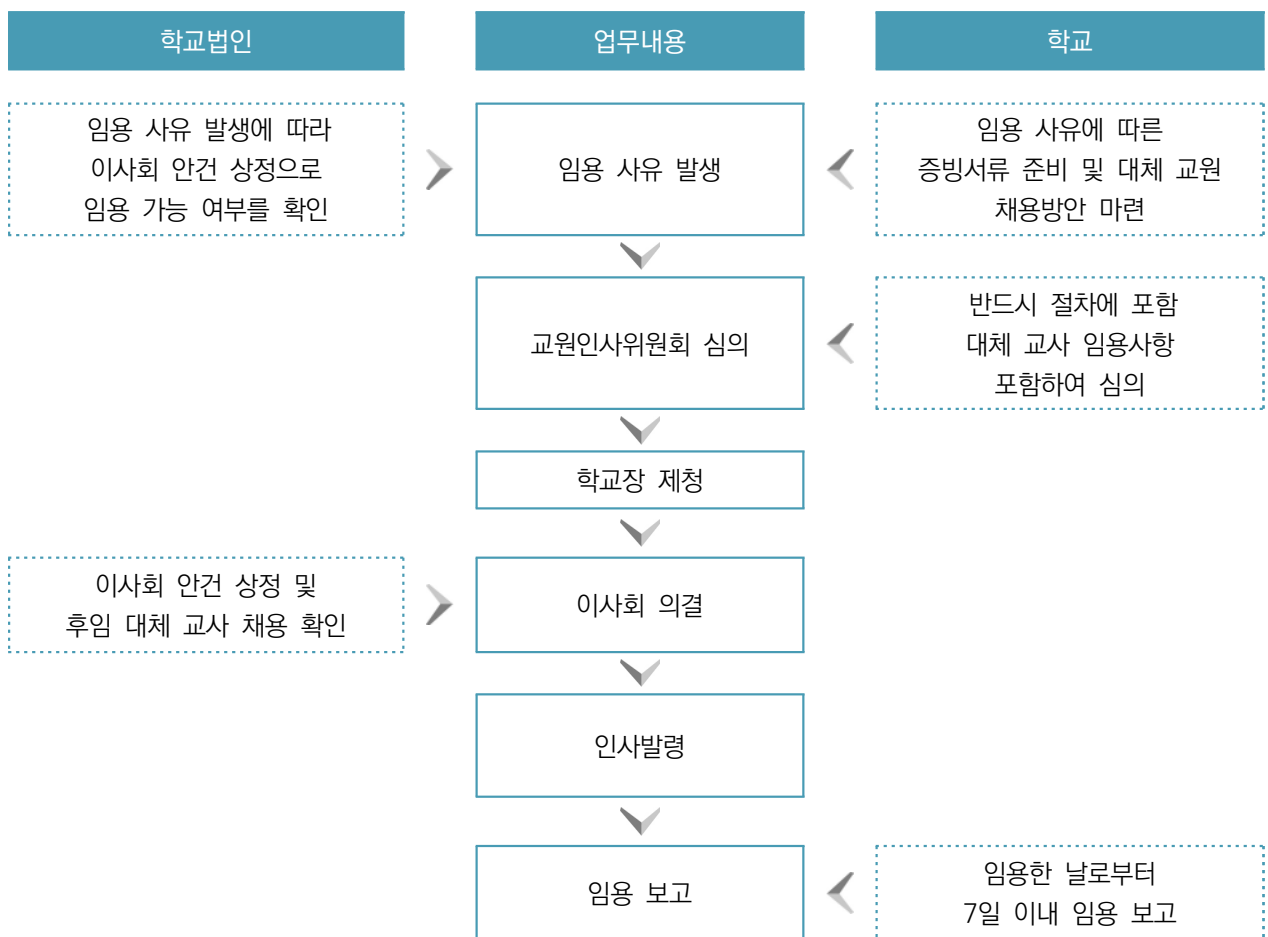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3(파견근무)

2

업무처리 절차



3 전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가. 전보의 정의

- 동일직위 또는 자격 내에서 임용권자가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함.

나. 전보의 시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

다. 전보의 절차

-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전입 및 전출 대상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소속 학교장 및 전보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후 임용하고,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청으로 보고

라. 전보 시 유의사항

- 학교법인 내 교원전보 인사는 전보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시
- 교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사회 의결 시 전보대상자의 동의여부 및 전보사유의 명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
- 동일 학교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등을 통해 과목 과원 및 상치과목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하여 학기 중 전입·전출을 지양
- 임용권자가 각각 다른 법인간의 교원 전보는 불가하며, 교원이 필요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10항에 따라 공개전형에 따른 신규채용을 해야 함.

참고 전보 사무처리 보고 관할청

대 상	보고기관(수신처)	비고
중학교 ⇒ 고등학교로 전보	본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중학교로 전보	본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고등학교로 전보	본청	

4 파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파견의 사유 · 기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을 준용하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본다.

나. 파견 절차

- 1) 파견 시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함.
- 2)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 교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함.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학교(재단)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행함.

다. 파견 시 결원보충 및 파견 중인 자의 승진

- 1) 결원보충: 정규 교원 보충 불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파견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후임자 보충 가능
- 2) 승진: 파견 중인 자는 승진 불가

라. 파견 중인 자의 복무 및 보수

- 1) 복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 발생시 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2) 보수: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타 수당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마. 파견의 종류

구분	파견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기 간
1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호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2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3호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
5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1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6호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2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7호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6월이내. 6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8호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이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9호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1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참고 “파견”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VS 사립학교법

구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제6항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제4호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참고 겸임과 겸직

구분	겸임	겸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목적	임용권자의 필요	개인의 필요
효과	공무수행	사적 업무

5 겸임

가. 자격기준

- 겸임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 겸임사유

-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겸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 교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 간 또는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간 겸임 가능

다. 겸임기간

- 1년 이내 (정보교과 등 선택과목에 따라 한 학기 겸임도 가능)

라. 임용방법

1) 동일 법인 내 사립학교간 겸임

- 겸임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겸임학교장이 소속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

2) 공·사립학교간 겸임(순회)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 지역청 단위의 겸임(순회)협의회 실시
-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 교육감(고등학교) 또는 교육장(중학교)의 발령

마. 겸임근무와 복무

1) 겸임교사의 겸임근무시간은 학교간 협의하여 운영

2) 소속학교에서 출장 신청하고, 겸임학교장은 겸임근무시간 동안 복무 관리함.

3) 겸임학교 근무시간은 겸임학교 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며, 겸임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를 이탈하여서는 안됨.

4)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제 2 절 자격변동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2 자격변동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가. 자격변동의 요건

- 1) 정교사(1급 및 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 및 2급) 상호간 변동되는 경우

- [예시] 국어 정교사(2급)에서 정교사(1급) 자격 취득
- [예시] 국어 정교사(1급 및 2급)에서 보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여 보건교사로 임용

- 2) 과목별 정원 범위 내 교과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자격변동의 절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진행

다. 자격변동과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 1)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
[예시] 국어 정교사(2급)에서 국어 정교사(1급) 자격 취득
- 2)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시 신청일 다음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 불가)



제 3 절 과목변경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2

과목변경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가. 과목변경의 요건

- 과목별 현원이 정원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과목변경으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불가)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 교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의 표시과목이 충원하고자 하는 과목과 일치된 교원 중에서 책임자가 있는 경우

나. 과목변경의 절차

- 1) 과목별 정원을 산출하여 배정한 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진행
- 2) 과목변경 이사회 의결 및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 후 7일 이내 관할청에 임용 보고

제 7 장
징 계



제 1 절 징계 일반

1 관련 법규 및 지침

법률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대통령령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행동강령
총리령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대통령 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 징계의 의의

- 학교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해 학교법인이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3 징계별과 형사벌

징계별	형사벌
사용자의 입장에서 교육조직의 내부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가해지는 일정한 수준의 신분적 제재가 주요 내용임	국가통치권에 기초하여 반사회적 법익침해에 대한 국가 사회의 일반적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제재의 방법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은 물론 재산·자유·생명까지도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양자간의 관계

-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별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따라서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 종류			징계의 효력	관련 법규
배제 징계	중징계	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또는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교원 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사립학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시행령 제66조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또는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교원 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단,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하되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감액) 	
교정 징계	중징계	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계급 내림+정직 3월 처분 기간(3월)+18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9년 처분 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사립학교법 제6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정직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전액 감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7년 처분 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경징계	감봉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봉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을 감함 처분 기간 및 처분 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5년 	
		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 승급 제한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3년 	

※ 승진제한: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추가(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급제한: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추가(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승급산입: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함.)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 사립학교법 제63조(제척사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위원의 기피 등)

2 교원징계위원회 설치와 근거

가. 성격

- 1)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기구로서 상설임.
- 2) 교원징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의결된 양정을 변경(중한 벌을 과하는 것은 물론 감경조치를 취하는 변경을 포함)할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가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3년)와 연임(1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설치되는 비상설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4056 (2018.08.09.)]

* '징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징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나. 설치

- 사립학교법 제6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둠.

다. 기능 및 의결정족수

- 1)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심의·의결
 - ※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6항의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3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가. 구성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 이상 8인 이하
 -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인 이상 11인 이하
- 2) 다음 각 호(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나. 구성 기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한정)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1)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함.

참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 9인으로 구성할 경우 (법인이 3개의 학교를 유지 경영할 경우)

학교명	법인 이사*	법인 이사*	법인 이사*	교사	교사	교사	외부위원1 (학부모위원)	외부 위원2*	외부 위원3*
△△중	김OO	이OO	박OO	△△중 박OO	△△중 이OO	△△중 최OO	△△중 임OO	변호사 문OO	최OO
△△고	김OO	이OO	박OO	△△고 오OO	△△고 윤OO	△△고 박OO	△△고 한OO		
◇◇고	김OO	이OO	박OO	◇◇고 김OO	◇◇고 장OO	◇◇고 남OO	◇◇고 최OO		

↔동일인가능↔

↔해당 학교 교사 및 학부모 위원↔

↔ 동일인가능 ↔

* 학교법인 ◇◇학원 △△중 교원징계위원회, 학교법인 ◇◇학원 △△고 교원징계위원회, 학교법인 ◇◇학원 △△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별개의 교원징계위원회이므로, 각 교원징계위원회의 법인 이사위원 (또는 외부위원)이 서로 동일인이어도 되지만,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음.

참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 개정법 제62조 제2항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고만 규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시행령 제24조의2와는 그 규정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인 학교법인의 이사와 피용자 측인 당해 학교의 교원이 절반씩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종래 한 개의 학교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혀 다른 학교의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교사로서의 자질,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징계대상자가 속하는 '당해 학교의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 제62조 제2항의 당해 학교를 종전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산하 학교이면 징계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이든 다른 학교의 교원이든 상관없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4 위원의 임기

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가. 외부위원의 임기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사립학교법 제62조의2)

나.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징계위원회가 상설기구이므로 외부위원의 임기 등을 참고하여, 일정한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외부위원의 해촉

-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외부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겸직허가 대상 여부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위원의 제척 및 기피

가. 제척 사유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함.

나. 위원 기피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인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함.

참고 제척사유 취지 관련 판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 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하면 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1428 판결]

참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음.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 기피로 출석위원이 미달한 경우의 의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8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고 신청된 위원의 기피 의결 참여 결정례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과정에서 기피신청된 2명의 징계위원은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지 않고 5인의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피의결을 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 [교원소청 2007-469]



제 3 절 징계심의위원회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 사립학교법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2

징계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가. 설치

- 시·도 교육청(사립학교법 제62조의3 제1항)

나. 기능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관련 재심의
- 관할청 요구에 의한 징계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할청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절차에 따라 관할청에서 징계 재심의 업무를 담당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구성

-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사립학교법 제62조의3 제2항)
- 2) 교육감이 위촉(제62조의3 제3항)

나. 위원의 자격 조건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위원의 임기

- 3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4

징계심의위원회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사립학교법 제62조의 제5항)

-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조항 준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입법 예고

제24조의11(징계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의3 제5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에 필요한 사항은 동 시행령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보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재심의요구”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교원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과태료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제 4 절 징계 절차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 사유)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2

징계 사유

가. 징계 사유

- 1) 징계 사유란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함
- 2)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 사유)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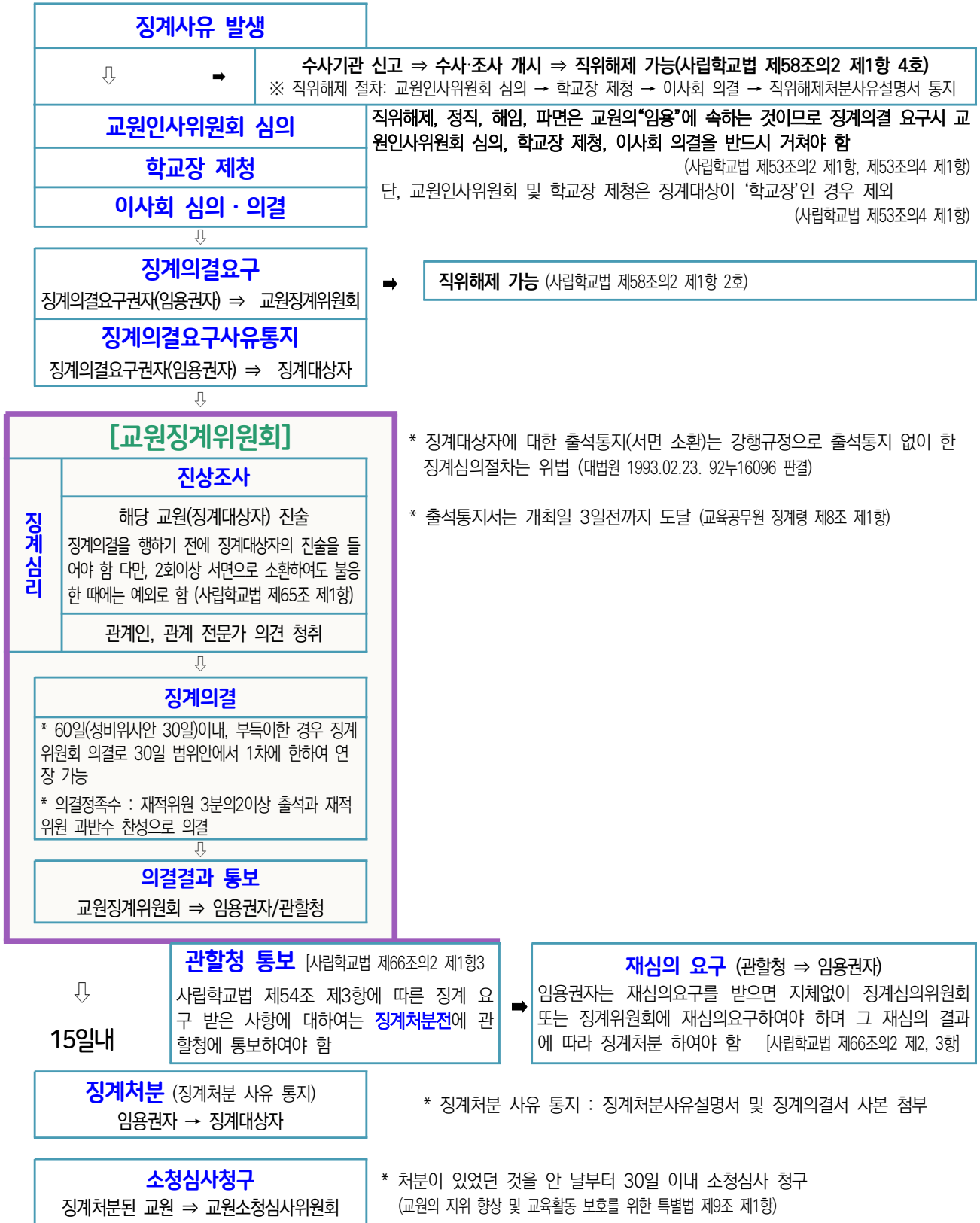
나. 징계 사유의 시효

-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
-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3

징계 절차



4 징계 의결 요구

가. 징계의결요구 및 절차

-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2)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대한 기속행위로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음.

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보내야 함.

다.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사립학교법 제65조)

-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경우는 예외임.
- 2)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징계의결기한(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2)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마. 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

- 1)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
- 2)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함.
- 3)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 4)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함.

바. 징계의결서 작성요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함.

사. 소청심사청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1)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며 30일의 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음.

5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 기준

가. 징계기준

-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제2조**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생략 …
- ②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관련(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이익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비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나.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교원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사건의 경우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함.
-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 제1항(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업무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	중요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중요 사항			1	2	3	4
단순·반복 업무	경미한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

비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다. 징계의 감경기준

-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2)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 학교폭력 은폐 등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이 제한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징계 감경기준)

징계	감경되는 징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라. 성비위 교원에 대한 보직 등 관리의 원칙

- 1)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파면·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견책: 5년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3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6

강임·직권면직·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

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예외임.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나.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다.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라. 종류

1) 강임(사립학교법 제2조):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 범위: 바로 하위 직위로 임용함이 원칙

2) 직권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 정의: 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는 것
- 사유

- ①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②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③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④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⑤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 단, ②~⑥의 사유에 의한 직권면직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직권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함

- 직권면직은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말함. 직권면직은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 면에서 징계 면직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교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해임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교원의 신분보장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함.

3) 직위해제(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리한 처분’에 속함.
-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법 제29조(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4) 불문경고

-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 경고 및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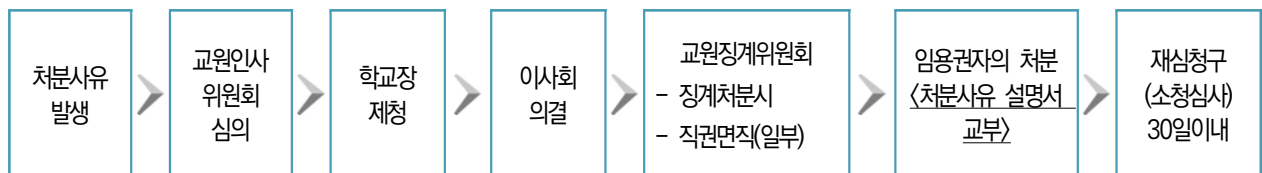
불문경고와는 달리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징계와 기타 처분의 비교

구 분	징 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신분관계	신분관계 유지(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신분관계 소멸(파면, 해임)	신분관계 유지	신분관계 소멸
직무종사 의무	직무종사 의무(감봉, 견책) 직무배제(강등, 정직)	직무배제	
승급 및 보수 등	제한	제한	

마. 불리한 처분 절차 요약

1) 불리한 처분의 일반적 절차



※ 상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불리한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

※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한 '처분 사유설명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해야 함.

2)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 「사립학교법」제56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직위해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는 처분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여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7

비위 교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

- 1) 1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2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3) 3호: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4호: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제4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함

나.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61조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정

제7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원면직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표를 수리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확인치 않은 경우, 의원면직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 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및 재심의

가.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 1)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 2)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학교장 해임 요구)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을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사립학교법 제66조의2)

-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함.
- 2)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함.
- 4)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
- 5)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9

과태료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할청이 요구한 교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
 - 관할청이 요구한 학교장의 해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
 -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할 때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절 소청심사 청구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구제명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 및 효력

가. 소청심사의 청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함.

나. 소청심사 결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결정의 효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이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3 구제조치 및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가. 구제조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 1)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하여야 함.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됨.

나. 구제명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다. 이행강제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4)

- 1)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함.
- 2) 교육감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4 관련(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4회
1.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1,000	1,300	1,600	2,000
2. 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500	750	1,000	1,400
3. 감봉, 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300	500	700	900
4.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법 제10조의4제1항	200	300	4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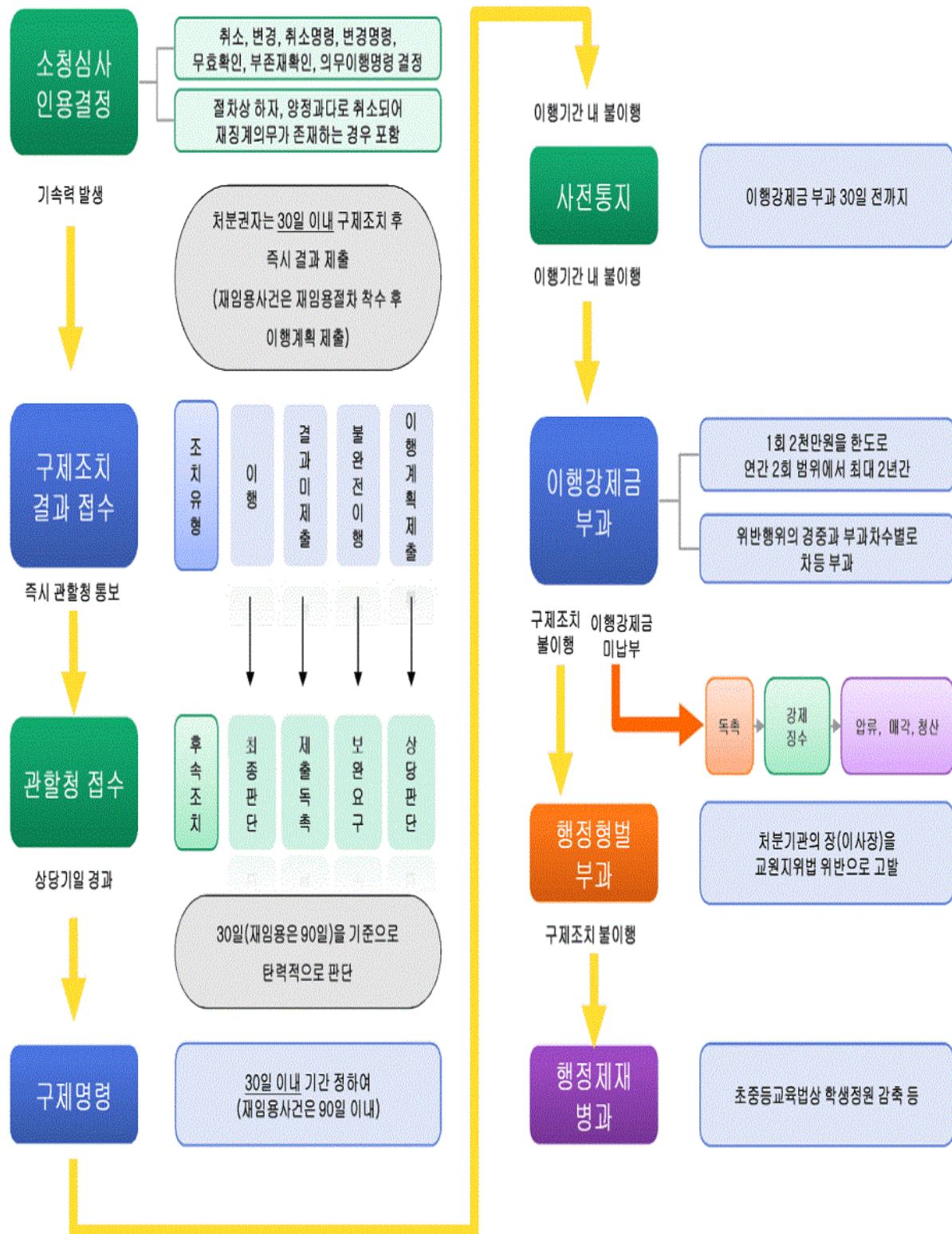
라. 재징계의결 요구의 요건 및 기한

- 1) 아래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양정 과다
- 2) 처분권자는 위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함.

마. 재징계시 징계관할 등

- 재징계시 징계 관할은 징계 등 혐의자가 현재 소속한 기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 됨.

※ 소청심사위원회 구제조치 및 이행강제금 흐름도





제 6 절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2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가. 말소대상 기록

- 1) 징계기록: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처분의 무효·취소로 확정된 해임, 파면
- 2) 직위해제기록: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 3) 불문(경고)기록: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

나. 말소제한 기간

처분	징 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말소제한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말소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함.

- 1) 말소 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 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 기간
- 2)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다. 말소권자

- 인사기록카드 정보, 부분 등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

라. 말소 절차

- (말소 사유 발생)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 기록의 말소 → 말소 사실의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 관리대장 정리

마. 징계처분 말소 기록

1) 말소 제한 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 규칙 제8조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 위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효력)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92.02.14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 21개월이 끝나는 '93.11.14부터 7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발령일로부터 3월이 지난 '92.05.14부터 기산하여야 함.

〈예시〉

- ① 정직처분의 말소 '00.05.07 정직1월 처분시 '00.06.07부터 기산 7년 뒤인 '07.06.07 말소
- ② 감봉처분의 말소 '02.10.13 감봉2월 처분시 '02.12.13부터 기산 5년 뒤인 '07.12.13 말소
- ③ 견책처분의 말소 '03.02.07 견책처분시 3년 뒤인 '06.02.07 말소

• 중복처분의 경우

- 규칙 제8조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 ① '03.11.01 정직 3월처분 ('04.01.31 집행종료)/ '03.12.05 견책처분
 - ☞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7년)과 견책의 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이 되므로, 정직 3월 처분의 집행 종료일인 '04.02.0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14.02.01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됨
- ② '02.02.01 견책처분 / '05.01.10 감봉 1월처분 / '06.09.25 정직 3월처분
 - ☞ 선행 징계처분일인 '02.02.01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 (0월+1월+3월)과 말소제한기간 (3년+5년+7년)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17.06.01에 견책, 감봉1월, 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

2)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취소결정: 본안심사결과 원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 결정
- 무효확인: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 결여, 진술권 불부여 등)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 확인이 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등의 요구)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 결과를 보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무효가 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됨.

〈예시〉

- ① '02.04.18 해임처분 / '02.06.02 취소결정 / '02.06.07 재심요구 / '02.08.24 감봉 1월로 변경 결정 / '02.09.01 감봉 1월 처분
 ☞ 해임은 '02.06.02자로 말소하고, 감봉 1월은 '02.10.01부터 기산 5년 뒤인 '07.10.01 말소
- ② '04.03.05 감봉 2월 처분 / '04.04.02 무효확인 (위원회 구성의 하자) / '04.05.07 감봉 1월(재징계)의결 / '04.05.14 감봉 1월 처분
 ☞ 선행처분인 감봉 2월은 '04.04.02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은 '04.06.14부터 5년 뒤인 '09.06.14 말소

◦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

- 일정 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예시〉

- ① '07.07.05 견책처분 / '08.08.15 특별사면 / '09.07.05 정직 3월처분
 ☞ 견책기록은 '08.08.15자로 말소하고, 정직 3월처분 기록은 '09.10.05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16.10.05에 말소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 시 교원인사기록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등의 요구)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취소·무효 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제3항 규정을 적용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서는 안 됨.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제3항 규정상의 “해당 사유 발생일 전” 이라 함은 무효·취소되었으나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임.

3 직위해제 말소

가. 직위해제처분 말소 기록

1)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동시에 말소함.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

① '02.05.09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 '02.08.09 복직

'04.02.27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 '04.05.27 복직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02.08.0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06.08.0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이때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① '08.04.15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 '08.07.15 복직

'10.04.01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 '15.07.04 복직

☞ '15.07.04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

4 불문경고 말소

• 불문경고처분 말소 기록

- 불문(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경고처분은 말소제한기간 1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되고, 동 기간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이 있을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제 8 장

기간제교원 및 교원의 호봉



제 1 절 기간제 교원

※ 매학년도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

1

관련 법규 및 지침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매학년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임용 절차(사전 점검 사항)

처리절차	체크사항
1. 결원발생	내부 인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2. 임용계획 수립	임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임용계획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였는가?
4. 임용심사위원회 위촉	3~5명 이내, 교감, 동학년, 동교과 교사 포함하는가?
5. 채용공고	교육청 홈페이지 3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6. 심사(1차 서류 ~4차 면접)	최종 심사 결과를 학교장(이사장)에게 송부하였는가?
7. 임용전 결격여부 조회	결격사유,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이상 없는가?
8. 임용발령 및 계약체결	채용 시 구비서류, 계약서 빠짐없이 징구하였는가?
9. 채용결과 보고	7일 이내 관할 교육청으로 보고되었는가?
10. 인사발령대장 및 NEIS 등재	발령 대장, NEIS 등재는 즉시 이루어졌는가?
11. 기타사항	임용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되었는가?

※ 임용 절차(흐름도)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결원 발생	정원 대비 현원 결원 발생 (1월 이상)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임용 사유 발생	
↓		
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반드시 수립하여 실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장(법인)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임용 계획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		
임용심사 위원회 위촉	임용심사위원회 위촉(3~5명 내외):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학교장(법인)
↓		
채용 공고	<div> 〈정원 대비 결원 대체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 채용 공고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div> <div> 〈법 제54조의4의 임용 사유로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 채용 공고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div>	학교장(법인)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서류 심사 평가	임용심사위원회
↓		
2차 필기시험	선택형, 서답형 등	임용심사위원회
↓		
3차 수업실연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또는 수업 실연 평가	임용심사위원회
↓		
4차 면접심사	면접 평가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임용심사위원장 → 학교장)	임용심사위원회
↓		
임용 전 조사(회)	• 결격사유 조회(모든 기간제교사)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모든 기간제교사)	학교장(법인)
↓		
기간제교사 임용 및 계약	채용계약서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학교장(법인)
↓		
임용 결과 보고	• 임용 후 7일 이내 보고	학교장(법인)
↓		
발령대장 및 NEIS 등재	• 인사발령대장 등재, NEIS에 계약직교원 경력 관리	학교장(법인)
↓		
재계약 여부	• 교원인사위원회 적격여부 심의	학교장(법인)

※ 임용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시기 바람

※ 각종 서식은 해당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확인

2 결원 발생(임용의 법률적 근거)

가. 채용 사유

-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교사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교원의 보충이 필요한 때

참고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교원 임용 인정 범위

- 선택적 교과 운영
- 특성화학교 운영 및 특성화학교 전환을 위한 한시적 교과 운영
- 학급 감축에 따른 한시적 교과 운영
- 명예퇴직 또는 갑작스러운 의원면직으로 신규 공개 채용 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나. 채용 전 확인사항

- 1) 교원의 정·현원
 -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대상교는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에 의거 매년 배정되는 정원에 의함.
 - 교장 또는 교감 직무대리자의 대체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음(교원수급계획 고려)
 - 최소 3개년 간 학교수용계획에 따른 학교별 학급수 증·감 현황 및 자율학교 신청, 계열변경, 학칙 변경, 특성화학교 전환 등에 따른 교원 수급계획을 철저히 고려(채용사유 타당성)
 - 단순 결원보충을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음.
 -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교원 임용 인정 범위 이외에 기간제교원 임용은 불가
- 2) 채용 과목과 소지 자격증 일치 여부 확인
 - 특수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기준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므로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보고 불가
- 3)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사전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일정 확인
 -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간제교원 임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임용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적극 권장
 - 기간제교원 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이 지연될 경우 소급 임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임용절차를 준수하여 관할청에 7일 이내 보고

다. 기간제교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

- 채용 공고 의무화
 - 방법 및 기간 : 학교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일 이상 공고
 - 내용 : 계약 조건,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3 임용계획 수립(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가. 목적

- 1)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성 확보
- 2)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시스템 구축

나. 운용계획 수립 시 권장 사항

- 1) 임용 사유 및 관련 법령
- 2) 채용 방법, 채용 기간, 채용 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 구체적 제시
- 3)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3~5명 이내, 교감, 동학년, 동교과 교사 포함(서약서 징구)
- 4) 전형 절차(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수업실연, 4차 면접심사 등)
- 5) 전형 절차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 : 예시) 서류 40%, 면접 60%
- 6) 최종 합격자 선정 방법
- 7) 공고문 및 응시원서, 평가표, 서약서 등 각종 응시(채용) 구비서류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가. 근거

-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나. 심의 및 결과 통보

- 1) 관련 법령 및 정관(규칙)에 따름.
- 2)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임용권자에게 결과 통보

참고 심의 결과에 대한 기속력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두 17979 판결)

5 임용심사위원회 위촉

가. 근거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 채용)
- 2) 법인 정관 및 인사 규칙

나. 운용 방법

- 1) 3~5명 이내 임용심사위원 구성 : 교감, 동학년, 동교과 교사 포함.
- 2) 서약서 징구

6 채용공고 및 심사

가. 근거

-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 채용)
- 2) 계약제교원 임용계획

나. 운용 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등 3일 이상 채용공고)

공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번호, 채용과목 및 채용 기간 • 채용조건, 자격요건 • 제출서류(응시원서) ※별첨 서식 • 접수 기간 및 제출처 • 전형 방법 • 기타 유의사항 및 연락처
서류 심사 및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서식 •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실연 문제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요소 제시
심사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심사위원장 → 학교장(이사장)

다. 채용 심사 시 유의사항

- 1)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 2) 1차 서류 심사, 2차 수업 실연, 3차 면접 등 적격자 선발 위한 절차 마련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3)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는 참여 제한
- 4)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참고 채용 자격과 연령

- 채용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채용 연령: 만62세 미만,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
- 2차까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3차 모집 응시 자격에 예외적으로 65세까지 포함하여 공고 및 임용 가능
- 정년퇴직·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2차 이상의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함

라. 채용 절차 의무 이행

- 1) 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초·중등 신규 임용후보자,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를 채용할 경우 채용 절차 중 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단, 채용계획 수립 및 면접,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는 준수)
 -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채용 시 채용 공고, 심사 및 구비 서류를 생략하고 계약 가능(시도별 확인)
 - 중등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교육청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내에서 공고 없이 우선 채용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서류는 학교에서 모두 징구하여야 함.
- 2) 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마. 채용 우선 순위: 해당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름

- 1) 1순위: 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채용 공고 생략)
 -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인력풀 (확인 필요)
 - 중·고등학교: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 2) 2순위: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공개 채용 절차 준수)
- 3) 3순위: 퇴직 교원 등, 다만 퇴직 후 6개월 미만인(1년인 지역 확인) 명예퇴직 교원은 가급적 임용하지 않도록 하되,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재공고 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바. 채용예정자 서류징구 시 유의사항: 해당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름

- 1) 교육청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 관련 서류 징구 생략(교육청 일괄 보관 임용대기자 확인서로 대체)
- 2)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대상자
 - 채용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학교에서 징구
- 3)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는 반드시 실시
- 4) 기간제교원 경력자
 - 다른 학교에 재채용 시는 기존 제출 서류 활용 가능
 - 직전 채용 학교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다음 학교로 이관(기록 유지)
 -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법정 기한 내 유효(판정일로부터 1년)
 - 결격사유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재실시
- 5) 동일학교(기간)에서 연장 계약시 추가 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경과 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회보서
- 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금지

참고 채용 서류 접수 및 반환 관련 유의 사항

가. 채용서류 접수

- 1)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 2) 방법: 방문·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 받으며,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휴대전화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나. 채용서류 반환

- 1)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2) 방법: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탈락한 지원자가 청구서(서식 26)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은 보관(반환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의무 없음)
- 3) 유의사항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의해 채용서류 반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함
 - 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 최종임용자의 채용관련서류「준영구」
 -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관련서류「5년 보관」
 - 다) 기간제교사 계약 전 공고 및 모집 단계에서 채용원서(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등은 하지 않아야 함

7

임용 전 결격여부 조회

가. 결격사유조회

-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2) 대상 : 모든 기간제교원 ☞ <서식>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예시)
- 3) 조회 의뢰처 :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동장 및 관할 경찰서(2군데)
- 4) 조회방법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에 접속하여 결격사유 유무조회, 열람, 결격사유가 유(Y)로 열람될 시에만 임용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결격사유조회 회보 요청하여 상세 확인, 관할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도 같이 조회(교육부 교원정책과 -7011, 2017.10.31., ☞ <붙임 서식 9 참조>)

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1) 관련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 2) 대상 : 모든 기간제 교원 <서식>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3) 조회 의뢰처 : 관할 경찰서(수사과) 또는 온라인 시스템 이용
- 4) 조회방법
 - 공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 요청 ☞ <붙임 서식 10 참조>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es.police.go.kr) - 공인인증서 접속 -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 예정자 등 동의 - 기관장 신청·발급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

8

임용발령 및 계약

가. 임용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참고 2]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나.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

다. 임용 상한 연령

- 1)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단, 정년의 적용은 계약 시점임)
- 2) 퇴직교원(정년, 명예)의 경우 만 62세까지 가능(교육공무원의 정년과 동일, 정년의 적용은 계약 시점임). 단, 반드시 공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3차 공고 시 채용 가능함(최근 1년 미만 명예퇴직교원은 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임용 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4)

※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구분	제출서류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
최종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9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연수 대상

- 1) 6개월이상 임용(예정)자는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 이수
- 2) 신규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전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마친 자 또는 퇴직교원으로서 직전 3년간 소양 또는 직무 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함.

나. 연수 내용

- 1)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
- 2)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구분	자질·소양 및 직무연수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등 연수 •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연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로 자율연수 참여 • 직무연수(기간제교원 모집) 신청
연수시기	•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연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 연수비는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로 지원

※ 수석교사를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다. 연수실적 관리 : 학교에서 연수실적 관리대장 작성·관리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예) 제○○조(연수) “○○○”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소양 및 직무연수를 ○○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연수 실적 관리 대장(예시)

순	학교명	성명	연수 구분 (소양·직무)	연수 시기 (학기중·방학중)	연수 시간	연수 내용	결과 활용
1	○○중	홍길동	소양	학기중	14.08.01.~08.31.(60시간)	수학과 교수학습방법	교과지도 활용

10 기간제교원 채용 기간

- 기간제교원 채용기간
 -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총 4년까지 임용 가능)
 - 4년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임용

11 기간제교원 계약 기간 연장 및 재임용

가. 계약기간 연장

- 1) 정의 : 동일 사유(휴가 연장, 휴직 연장 등), 동일 결원 교사에 대한 동일 대체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 교사(A교사)가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정규 교사(A교사)의 출산 휴가에 따라 임용한 기간제교사(B교사)를 계속해서 임용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는 동일 사유가 아니므로(첫 번째는 출산휴가, 두 번째는 육아휴직)계약 기간 연장이 아니라 재임용임

- 2) 예시

- 정규 교사의 육아휴직(첫째) 6개월 사용 후 휴직 기간(첫째) 연장 시 계약 기간 연장 가능
- 정규 교사의 출산휴가 90일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 임용 만료 후 기간 단절 없이 동일 교사의 병가 10일 연장 시 법정 잔여 병가 일수 범위 내에서만 동일 기간제교사 계약 기간 연장 가능(기간제교사 발령 대장에는 ‘동일 사유 계약 기간 연장’으로 임용 기간을 추가 기록)

- 3) 계약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 A교사의 결원에 따라 기간제교사 B와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공고 없이 내부결재(회의록 첨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

나. 재임용

- 1) 정의: 정규 교사의 결원 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사를 계약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 교사의 결원 사유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 '출산휴가 → 질병휴직'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계약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교사 뿐만 아니라 동교과 교사도 가능함.

2) 예시

- 정규 교사(A교사)의 출산 휴가(둘째 아이) 90일에 따른 기간제교사(B교사)와 계약 기간(90일) 만료 후, 동일 교사(A교사)가 기간 단절 없이 육아 휴직(첫째 아이 또는 둘째 아이), 또는 질병 휴직 3개월을 신청한 경우, 계약 사유를 달리하여(출산 휴가 → 육아(질병) 휴직) 동일 교과 대체 기간제교사(B교사) 재임용 가능
- 정규교사(A교사)의 질병휴직(2016.3.1.~2016.7.22.)으로 임용한 기간제교사(B교사)를 동일 학교 정규교사(C교사)의 출산 휴가(2016.8.16.~2016.11.18.)에 따른 대체 기간제교사로 B교사를 채용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임용 가능

※ 재임용은 기간이 연속된 계약에만 적용함. 이때 '기간이 연속된 경우(기간 단절 없음)'란, 결원 기간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나, 휴업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함.

- 3) 재임용 절차 및 방법: 정규교사(A교사)의 결원에 따라 기간제교사(B교사)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공고 없이 내부결재(회의록 첨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

12 유의 사항

가. 기간제교원의 신분(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2)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나. 채용계약

- 1)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계약서 양자 보관)
- 2) 학년 초 1년 계약 시 3월 1일(공휴일)을 포함시켜 계약하여 퇴직금 지급 기준 확보 (동일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3)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 체결
- 4) 휴직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 계약서 상 임용기간 또는 계약해지 부분에 휴직사유 소멸로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당연 계약 해지됨을 명시(다만, 기간제 처우 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자에게 충분한 교육 및 지도 필요)

다. 퇴직금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동일 학교에서 근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참고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 방학기간 중 미임용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단절되었을 경우 방학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
- 1년간 임용이 예정되는 계약제 교원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 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 근무기간이 단절되었더라도 동일교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A교 6개월 근무 후 퇴직, 일정기간 후 다시 A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라. 기간제교원 채용 유의사항

- 1)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자 대체 기간제교사 임용 불가
- 2) 정원 내에서 임용 가능하며, 정원의 기간제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채용 시에는 교육청 사전 보고 후 인건비 자체 충당
- 3) 기간제교원 호봉확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계약기간동안 호봉 승급 없음)으로 지급
- 4) 공적연금 수급자(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4호봉(근무년수 5년)을 넘지 못함.
- 5) 대체 기간제교사는 그 결원된 교원의 담당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함.

참고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원자격증 관련

- 국어교과담당 교사 휴직으로 대체 기간제교사 채용할 경우 반드시 국어교과로 채용하여야 하며, 국어교과는 과원이고 일반사회 교과가 결원이라고 하여 일반사회 교사를 채용해서는 안 됨
- 교사자격증 표시과목과 담당 과목을 확인하여 상치과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예: 디자인·공예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미술교과 교사로 임용할 수 없음)

기간제교원 관련 자주하는 질문(Q & A)

Q1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

- ↳ 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Q2 계약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임의 전일이어서 1일이 부족함으로써 '1월'의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가?

- ↳ 담임교사와 같이 매일 계속되는 특정 직무를 부여하여 임용한 경우는 토요일임,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수업만 전담한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없음

Q3 여름, 겨울 휴가(방학) 중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

- ↳ 방학 중에도 계속 임용하고 보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해당 기간 중 담임교사로 임용한 경우(임용 기간 불문)
 - 비담임이면서 휴가(방학) 이후에도 계속 임용해야 할 사람 중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휴가 기간 중 특정 업무 부여)

Q4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Q5 기간제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교사 후임으로 연이어 1월 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연장 가능한가?

- ↳ 연장 가능함
(예시) 60일 병가 중인 교사의 후임으로 계약하여 기간 만료 후, 해당교사의 병이 완치되지 않아 만료일에 연이어 16일을 계약하는 경우(병가 후 연가 사용) 기간제 교원으로 연장 임용 가능함

Q6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호봉 재확정 가능한가?

-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호봉 재확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확정이 가능함

Q7 연금수당 대상 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정근 수당 지급을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를 제한하는 이유?

- ↳ 퇴직 교원 및 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연금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 연금수령미도래자 포함)는 보수액 산정 시 연금지급액(일시금 포함)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 인정 범위도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근무년수 5년 만을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 공고 제20-○○호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20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1. 임 용

- 가. 임용권자: ○○○학교장
-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학교 교사 1명, ○○과 1명
-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다. 계약 기간: 20... ~ 20...(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요일) 16:00 이후
-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요일) 16:00 이후
- 다. 3차 심사(면접 시험)
 - 3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요일) 00:00
-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 가. 기간: 20...(요일) 09:00 ~ 20...(요일) 15:00까지
- 나. 장소: ○○○학교 행정실(☎000-0000)
-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 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 마. 기타 사항: 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기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임용의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일 이내에 불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00-000-0000)

- 첨부) 1. 지원서 양식
2. 자기소개서 양식
3. 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제 2 절 교원의 호봉

1 관련 법규 및 지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
- 공무원보수 및 수당 규정 등

2 개요

가. 초임 호봉확정

1) 초임호봉 확정

초임호봉 (합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른 학령 및 사범가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른 경력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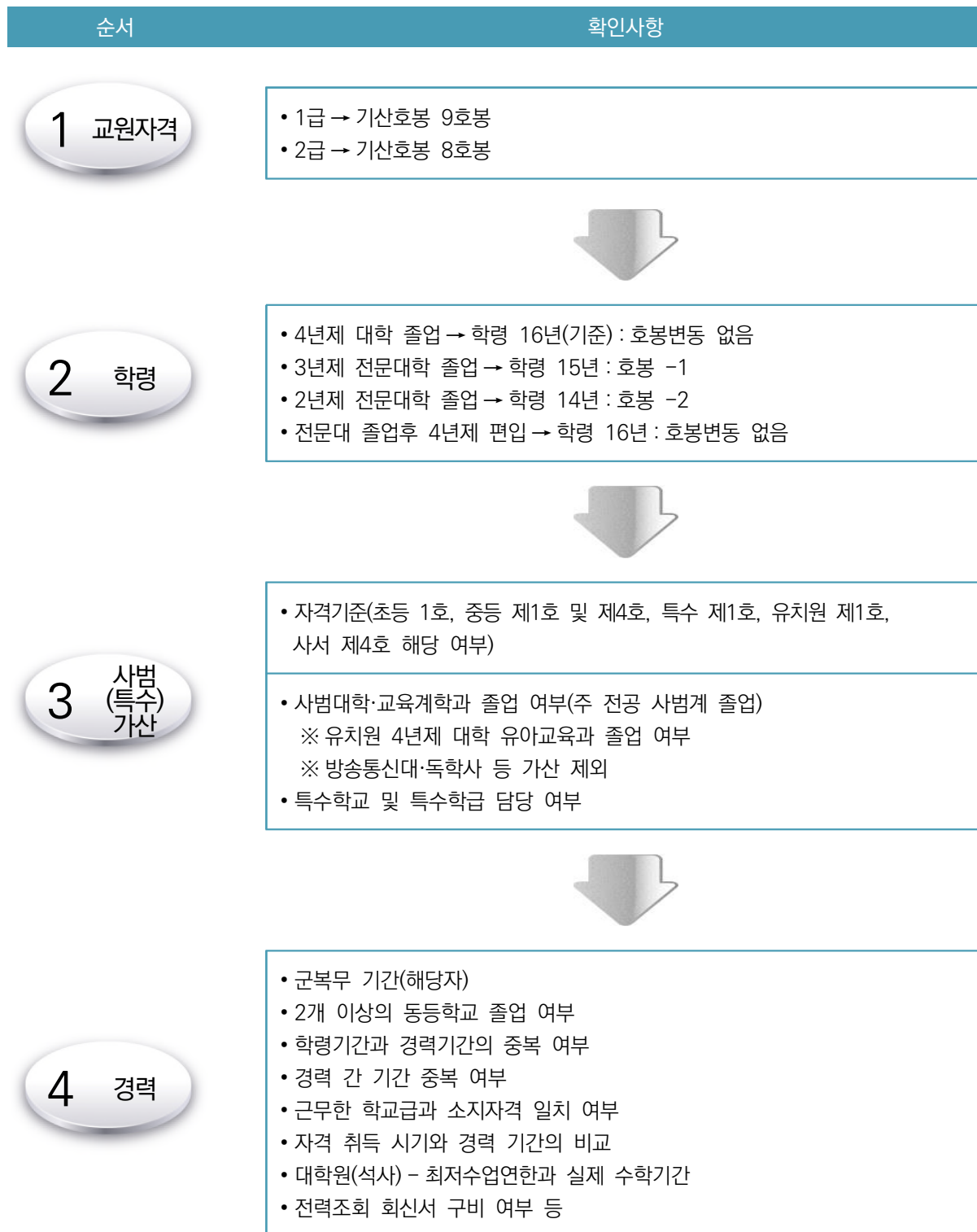
2) 호봉확정 시기: 신규 채용일 기준

- 3) 호봉제한(14호봉): 기간제교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는 호봉 재확정 및 승급을 할 수 없으며,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령 미도래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을 수 없음.

나. 호봉확정을 위한 준비(증빙)자료

- 1) 교원자격증(사본): 학교 급별 교원 자격기준[1급, 2급] 확인
- 2)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제출)
- 3) 성적증명서(입학년도 및 실제 수학기간, 학력과 경력 중복 확인)
- 4) 경력증명서(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및 전력조회 회보서 포함): 각 경력별 환산율 적용

다. 호봉획정 처리흐름도



3 호봉획정

가. 기산(시작) 호봉 적용

기산호봉		기산호봉	
자격	호봉	자격	호봉
정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정교사(2급)	8	실기교사	5
준교사	5	보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전문상담교사(2급)	8	영양교사(1급)	9
사서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 적용

* 예시1) 초등 정교사(1급), 특수 정교사(2급) 소지자가 특수학급 담당 : 기산호봉 8호봉

* 예시2) 중등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소지자가 상담교사로 채용 : 기산호봉 9호봉

나. 학령 산정

1) 학령산정 = 초등학교(6) + 중학교(3) + 고등학교(3) + 대학교(수학연수)

2) 산정예시

학령산정		학령산정	
졸업	인정학령	졸업	인정학령
4년제 대학	16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편입·졸업	16
3년제 전문대학	15	전문대학 졸업, 독학사(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16
2년제 전문대학	14	4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편입·졸업	16

※ 복수의 동등학위(또는 동등수준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

*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또는 동등수준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으로 인정(8할)

다. 사범 가산연수

1) 사범가산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이면서, 아래 교원자격증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가산연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교원	1년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교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교원	1년
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 2급 기준 제4호 해당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교원	1년

* 전문대, 방송통신대 졸업자 불인정. 단, 전문대 졸업후 사범대학(교육계학과 포함) 3학년 편입자 : 인정

* (교육)대학원 졸업으로 자격취득자(자격기준 중등 제2호, 초등 제3호 등) : 불인정

* 사범대학(또는 교육계학과) 졸업하고 실제 임용된 과목과 다른 자격 소지자 : 인정

* 1급 정교사 자격인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징구하여 자격기준 : 확인 필요

2) 특수가산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하고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교육계학교 포함) 졸업자(발급기준 특수 제1호) : 2년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비사범계학교(교육계학교 포함) 졸업자 : 1년

라.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호봉경력 인정의 기본조건 : 첫째 유급, 둘째 상근

(예외 : 시간강사 → 비상근이지만 실근무시간으로 인정)

2) 공무원 보수규정과 교육부 예규 경력환산율 불일치 할 경우, 상위 법령 우선 적용

내용	경력환산율		적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부 예규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 불일치하는 기간제교원	8할	5할	8할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할	8할	10할

3)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참조

4

호봉 재획정

가. 호봉 재획정 요건(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변동 및 학력변동)
 - 임용과목의 상위자격 취득(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한 경우)
 - 휴직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학력 및 경력의 중복 문제 반드시 검토)
- 2) 초임호봉 확정 시 누락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하는 경우
- 3)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
- 4) 해당 공무원(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확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단, 기간제교원의 경우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새로운 경력, 누락 경력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 하지 않음.

참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교원의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호)

- 징계처분기간,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은 승급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승급을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을 승급 기간에 포함하여 재획정

[예시] 2007.09.01.자로 정직 3월 징계를 받은 경우

2007.01.01. 15호봉 정기승급(잔여일수 없음)

2007.09.01. 정직 3월 징계처분 받음

2007.11.30. 정직만료(2009.05.31.까지 승급제한[정직 18개월 승급제한])

2009.06.01. 15호봉 정기승급(잔여일수 8월)

2010.10.01. 16호봉 정기승급(잔여일수 없음)

2014.10.01. 21호봉 정기승급(잔여일수 없음)

2014.11.30. 정직처분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7년 경과

2014.12.01. 22호봉 호봉 재획정(승급제한기간 정직 18개월 산입, 잔여일수 8월)

2015.04.01. 23호봉 정기승급(잔여일수 없음)

참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과 호봉 재획정

-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에게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호봉을 재획정함
- 단, 휴직·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전 정기승급 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여일수는 제외하고 재획정

나. 호봉 재확정 시기

- 1) 새로운 경력 또는 누락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교원경력: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유사경력: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3)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 복직일
- 4) 당해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확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전직임용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5 호봉 정정

가. 호봉 정정요건(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 1) 호봉 확정 또는 승급의 잘못이 발견된 때
- 2) 호봉 정정권자는 해당 사립교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나. 호봉 정정 절차 및 방법

- 당초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참고 호봉확정 잘못으로 인한 보수의 과다 및 과소 지급처리

- 호봉확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 일자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보수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마지막 정기승급일 다음날부터 3년 (민법 제163조)
-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학교가 당사자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정기승급일 다음날 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6 정기 승급

가. 대상 및 요건

- 1)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2)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 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3)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

- 1) 정기승급일: 매달 1일
- 2) 승급이 제한되었던 교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승급이 제한되는 휴직 복직 시)
- 3)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4) 승진 또는 강임 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교원
- 5)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훈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및 모범공무원 포상, 제안의 채택으로 인한 포상인 경우 승급제한기간 1/2 단축)

다. 절차 및 방법

- 승급 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 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라. 승급제한 만료와 승급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교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교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 다만, 이 경우 호봉은 당해 교원이 승급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차기 승급은 정기 승급일에 승급

마.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

- 1)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 제한 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
- 2) 또한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등 승급제한 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진행된다고 보는 것

[별표 22] <개정 2016. 6. 2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 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100퍼센트

구분	경력	환산율
3. 유사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 비교

-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법령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3]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text{총수학연수} - 16) + \text{가산연수} =$

비고

-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및 고등기술 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 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산연수
 -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 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	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대학 졸업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교등사범부(4년제)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전문대학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사범학교 졸업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고등학교 졸업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고등학교 1년 수료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법령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기산호봉	비고
정교사(1급)	9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정교사(2급)	8	
준교사	5	
전문상담교사(1급)	9	
전문상담교사(2급)	8	
사서교사(1급)	9	
사서교사(2급)	8	
실기교사	5	
보건교사(1급)	9	
보건교사(2급)	8	
영양교사(1급)	9	
영양교사(2급)	8	

참고법령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1. 교원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연수기관에 발령·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이내)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 이내로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근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10할 이내) -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 (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5할 이내)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 이내로 인정한다.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교원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한국학교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 (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환산율 8~10할)

경력구분	인정대상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목에 규정된 경력
나. 고용직공무원(8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나목에 규정된 경력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이내)

가. 강사 등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2)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3~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기간제 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div><p>※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p><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div>$\text{근무기간} \times \frac{\text{주당 실근무시간}^*}{\text{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table><tr><th colspan="4">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th></tr><tr><td>'05.2.28. 이전</td><td>'05. 3. 1. ~'06. 2. 28.</td><td>'06. 3. 1. ~'12. 2. 29.</td><td>'12. 3. 1. 이후</td></tr><tr><td>44시간</td><td>43시간</td><td>42시간</td><td>40시간</td></tr></table></div><p>*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p><p>※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p><p>※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할을 인정한다.</p></div>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 3. 1. ~'06. 2. 28.	'06. 3. 1. ~'12. 2. 29.	'12. 3. 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 3. 1. ~'06. 2. 28.	'06. 3. 1. ~'12. 2. 29.	'12. 3. 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 <table><tr><th>주당 수업시수</th><th>환산율</th></tr><tr><td>5시간 이하</td><td>5할</td></tr><tr><td>6시간</td><td>6할</td></tr><tr><td>7시간</td><td>7할</td></tr><tr><td>8시간</td><td>8할</td></tr><tr><td>9시간</td><td>9할</td></tr><tr><td>10시간 이상</td><td>10할</td></tr></table>	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															
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															
10시간 이상	10할															

나. 연구경력

1)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대학(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10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1학기 : 3. 1. ~ 8. 31. / 2학기 : 9. 1. ~ 2. 28)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 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 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1-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 직, 촉탁, 잡급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 서 지급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 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 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 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 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이내) •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임시 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 국공사립 유치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 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 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 •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 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5할 이내).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 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8할 이내)을 인정한다. <table><tr><th>직종</th><th>교원자격증(표시과목)</th></tr><tr><td>영양사</td><td>영양교사</td></tr><tr><td>전산보조</td><td>초·중등교사(전산)</td></tr><tr><td>과학실험보조</td><td>초·중등교사(과학과)</td></tr><tr><td>사서, 사서보조</td><td>사서교사</td></tr><tr><td>유치원교육보조</td><td>유치원교사</td></tr><tr><td>전임코치(체육)</td><td>초·중등교사(체육)</td></tr><tr><td>특수교육보조원</td><td>특수교사</td></tr><tr><td>상담사</td><td>전문상담교사</td></tr></table> ※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 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 등영어보조교사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2)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7할 이내)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 경력(7할 이내)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4)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6할 이내)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교회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로 근무한 경력 • 성당의 신부, 수녀, 수사로 근무한 경력 • 불교의 승려, 총무원임명 주지로 근무한 경력 • 원불교의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로 근무한 경력 ※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이었던 것은 제외한다.						
5)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5할 이내)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부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table><tr><td>공공기관 (준정부기관)</td><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td></tr><tr><td>기타 공공기관</td><td>(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td></tr><tr><td>산하 (유관) 단체</td><td>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td></tr></table>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유관) 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유관) 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이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근무한 경력						

7) 학원 강사 근무 경력 (5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근무한 경력 ※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이내로 인정한다.
8) 회사 근무 경력 (4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 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

비고 :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참고법령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이내)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1.1.22.)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환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10할 이내)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10할 이내)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10할 이내)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라.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이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이내)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10할 이내)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이내)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바. 전문상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이내)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또는 대학(전문대학)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담사로 근무한 경력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 기타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환산율 7~10할 이내)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이내)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나.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이내)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다. 공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이내)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환산율 7~10할 이내)

가.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보수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나.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환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이내)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국제항해에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
나.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이내)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
다. 항공학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이내)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항공법」 제29조의 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 과목과 동일한 비행교육 업무에 근무한 경력
라. 농공학과 교원	• 농촌진흥공사(10할 이내)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치과, 한의과, 수의과,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이내)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10할 이내)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 록이 된 개인병원(9할 이내)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문의(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10할 이내)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이내)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9할 이내)	• 대학(전문대학) 졸업후의 경력으로, 임용후 담당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경력

비고: 위 표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참고법령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

[별표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 2 및 비교 3 관련 해설

1. [비교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교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 22 비교 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별	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 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동일)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2. [비교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비교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9월 1일 ~ 2월 28일(말일)

※ 입학일(예시: 3월 4일)과 졸업일(예시: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 학점은행제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 23 비교에 따라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 학점은행제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 학위취득 시점 : 독학사 학위(2.28. 기준), 학점은행제 학위(2.28. 또는 8.31.기준)

제 9 장

판례 및 사례, 질의회신



제 1 절 교원의 임용

1. 이사장 배우자의 교장 임용 관련
2.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중임, 8년)되는 경우 교원으로서의 신분 상실 여부
3. 정년초과 교장의 임용제한 관련
4.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 관련
5. 사립학교 교장 공모제 시행
6. 사립학교의 교장·교감 임명일 기준
7.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 산정 관련
8.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
9. 교감임기제에 따른 강임처분의 재량성
10. 직위해제 처분 이사장 단독
11.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법조항만 기재된 경우
12.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취지 및 처분사유 기재 정도
13.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14. 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15.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절차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16. 신규채용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포괄성
17. 임용결격과 당연퇴직과의 관계
18. 사립대에서 교수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응시자격 제한 가능여부
19. 본인 협의절차 없이 진행한 전보처분의 권리 남용 가능성
20. 사립학교 교원의 타법인간의 전보 가능 여부
21. 사립학교 교원의 타법인간의 전보 가능 여부
22. 사립학교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 임용의 효력
23. 의원면직처분 절차 관련
24. 사립교원 퇴직시 이사회 의결 실시 여부
25.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26. 해임처분 무효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27. 사립학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및 임용기간
28. 당연퇴직임에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29. 교육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않은 교원의 경력인정 여부
30. 관련 교과 수업의 범주
31. 교원 자격 검정 없이 복수 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32. 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 동일한 임용 사유
33.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 동일하지 않은 임용 사유
34. 기간제교사 공개전형 실시 여부
35. 기간제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36. 경력 단절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37.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중 승급 관련

1. 이사장 배우자의 교장 임용 관련

질 의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2012두155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로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2.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종임, 8년)되는 경우 교원으로서의 신분 상실 여부

질 의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 시 당연퇴직 및 교원으로서의 신분 상실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94다4288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직함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됨

3. 정년초과 교장의 임용제한 관련

질 의

사립법인 정관에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교장 포함)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62세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0.12.24.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정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사항에 정년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62세를 초과한 자도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장 임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임기 4년 및 1회의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년이전에 교장 중임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장을 할 수 없는 등 중임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2세를 초과한 교장의 임용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법인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 관련

질 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학교법인이 정관에 교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령해석례 연도미상]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에서 사립의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제4항의 규정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4년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라는 단서 규정을 함께 명기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립학교법 제56조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정년규정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한 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다른 면으로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고령에 달하면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된다는 전제하에 직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정연령에 달한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직무수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무의 성질에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사립학교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의 준칙으로서 정관에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다고 해석함

5. 사립학교 교장 공모제 시행

질 의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에 반하여 중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위와 같이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은?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2. 4. 3.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에 공모로 하는 경우 공모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공립 공모교장처럼 재직횟수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1회 한하여 중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에서 계속 교장을 할 순 없습니다.

6. 사립학교의 교장·교감 임명일 기준

질 의

교감자격연수를 2006. 8. 24.자로 수료하였고, 2006. 8. 31.자(자격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교부일임)로 교부된 교감자격증을 2006. 9. 11.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6. 9. 21. 교감임명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의 교부 및 수령이 지연되어 이사회를 2006. 9. 11. 이후의 날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회에 교감임명 제청을 할 때,

1. 임명일을 자격이 교부된 날짜인 2006. 8. 31.부터 이후의 어느 날짜든 학교의 장이 제청을 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2. 2006. 9. 2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또는 그 이후의 날짜로만 임명일을 제청 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06. 9. 18.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의하면 "교원은 당해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라야 확정되어 임명되며 인사는 소급할 수 없으므로 2006. 9. 2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또는 그 이후의 날짜로만 임명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상 9.1일 임용예정이면 그 이전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를 열어 9월 1일 이전에 의결을 마치나 위 사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사회 의결 이후 날짜로 임용하여야 함

7.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 산정 관련

질 의

교원 등에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은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을 교감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의 교육경력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감임용일로부터 3년의 교육경력을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신

[교육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2.12.1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1]에는 교장 자격기준에서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교육경력은 교감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의 경력을 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8.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

회 신

[대법원 판례] 2004누8172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은 일정한 작위의무를 지우는 부담이 아니라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지 않을 때는 그 자격인정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해제조건으로 봄이 상당함

9. 교감임기제에 따른 강임처분의 재량성

회 신

[대전지법 2008가합669]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용)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

10. 직위해제 처분 이사장 단독

질 의

직위해제 처분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단독으로 한 경우

회 신

직위해제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권한행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 행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53조의2, 제16조 제1항)

11.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범조항만 기재된 경우

회 신

[교원소청 2009-335]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용법조만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 사유의 적시가 전혀 없고 처분사실도 처분기간 시작일이 지나서 통지한 것은 직위해제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

12.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취지 및 처분사유 기재 정도

질 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정도

회 신

[서울고법 89나239]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임

13.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회 신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판례 79누65, 79누154]

직위해제처분은 비위사건을 징계하는 처분과는 다르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판례 72누3]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75누121]

14. 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회 신

[대법원 판례] 2003두12639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15.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절차 및 징계처분과의 관계

회 신

[대법원 판례] 95다11689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 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16. 신규채용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포괄성

질 의

‘부정행위’의 의미 및 응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응시자가 위 모집요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 신

[대법원 판례] 2006다23817, 91누3284

▶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의 취소를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례 2006다23817, 91누3284)

17. 임용결과와 당연퇴직과의 관계

회 신

▶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 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판례 86누459) (서울행법 98구15275) (행정심판례 98-02985)

▶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임용무효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판례 95누9907)

▶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란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행위가 아니므로 신규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 승진임용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대법원 96누3333)

▶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 임용권자가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당연퇴직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음(대법원 판례 95누5905)

18. 사립대에서 교수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응시자격 제한 가능여부

회 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2조는 종교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종교계대학교의 교수 임용은 '고용'상의 계약관계이므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특정종교를 신봉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대학교가 건학이념과 관련이 없는 학문 분야인 건축학과의 교수 채용 시 그 지원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므로 채용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05진차345, 2007.6.29.)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19. 본인 협의절차 없이 진행한 전보처분의 권리 남용 가능성

질 의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 신

[대법원 판례] 97다18165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전보처분은 학교운영상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청구인이 겪을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교원소청 2003-22)

20. 사립학교 교원의 타법인간의 전보 가능 여부

질 의

사립학교의 학급 감축 등으로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임면권자를 달리하는 타 학교법인 간의 교원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지?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2013. 1. 8.

사립학교법에 임면권자를 달리하는 타 학교 법인 간의 교원 전보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 단서에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 법인 간 사립교원의 전보는 성립될 수 없으며, 교원이 필요한 사립학교는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21. 사립학교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 임용의 효력

질 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임용) 효력

회 신

[대법원 판례] 2005다44299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임

22.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회 신

[대법원 판례] 83누218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한 직권면직사유 중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3. 의원면직처분 절차 관련

질 의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교원 임면(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2005다62891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4. 사립교원 퇴직시 이사회 의결 실시 여부

질 의

교원 신규 임명 시에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원의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 보고 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사회 의결을 거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보고 시에만 생략하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질의 합니다.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2008. 5.2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면은 임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교원의 퇴직 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질 의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 하는지?

회 신

[법령해석례] 13-0087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6. 해임처분 무효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질 의

임용기간 중에 해임을 당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회 신

[대법원 판례] 92다40587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함

27. 사립학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및 임용기간

회 신

[대법원 판례] 99다5557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 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정관이 정한 임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8. 당연퇴직임에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2004다10350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9. 교육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않은 교원의 경력인정 여부

질 의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2002다70877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항 제1호는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면보고의 대상인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면권자에 의하여 감독청에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누락경력은 고용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누락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 또는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립학교교원누락경력인정 거부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행정심판례 98-06488)

30. 관련 교과 수업의 범주

질 의

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고등학교의 필수인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1. 9. 22.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보통교과 기술·가정 교과(군)의 ‘정보’과목은 정보·컴퓨터 정교사 자격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31. 교원 자격 검정 없이 복수 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질 의

학교여건 상 과목을 변경하여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게 되면 중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2011. 9. 14.

방통대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 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중국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중국어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국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통대 중어중문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중국어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사범대 또는 중국어학과 중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편입학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에 입학하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 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 동일한 임용 사유

질 의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또는 4년 미만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령해석례 11-0796)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법령해석례 10-0490)

33.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 동일하지 않은 임용 사유

질 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같은 학교에서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령해석례] 10-0490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음

34. 기간제교사 공개전형 실시 여부

질 의

휴직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6개월 이상)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1) 동일한 결원교사가 2) 동일한 사유로 3) 단 하루의 공백기간도 없이 6개월 이상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4) 임용 연장(재계약)을 희망하고, 임용당시 5)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공개전형 재실시 없이도 임용 연장(재계약) 가능

35. 기간제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질 의

기간제교사의 계속 근무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과목 변경에 의한 임용 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사회 기간제 교사로 계속 4년을 근무한 후, 도덕 기간제 교사 모집에 의한 도덕교사(복수전공에 의한 도덕교사 자격증 소지)로 다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생물 기간제 교사로 4년 근무하고 공통과학교사 모집에 의한(공통과학교사 자격증 소지) 공통과학 기간제교사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회 신

[교육부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4. 2. 18.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즉, 다시 말하면 4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과목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가 가능함

36. 경력 단절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질 의

바로 며칠 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기간제 선생님인데 몇일간의 기간 단절 이후 채용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채용하게 될 경우 결격 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또 해야 하는지?

회 신

단 하루라도 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하루 사이에 조회 내용이 변동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조회하여야 함.

37.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중 승급 관련

질 의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용 당시 확정된 호봉을 임용 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회신일 : 2007.10.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비고란에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승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에는 호봉을 재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절 교원의 복무

1.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외 근무
2. 교원의 서적 편집 및 판매 가능한지 여부
3.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맡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 여부
4. 부동산임대업의 영리업무금지 저촉 여부
5. 육아휴직 중 겸직가능여부
6. 병가에 대한 질의
7.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8.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9. 임신 중 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의
10. 질병휴직 후 정상적인 근무 중 새로운 질병휴직 가능 여부
11. 해외유학 휴직 가능 여부 질의
12. 육아휴직 중 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의 복직 관련(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해석
14. 휴직의 사유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 여부(유학휴직→육아휴직)
15. 휴직의 사유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 여부(질병휴직→육아휴직)
16. 육아휴직 요건
17.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18. 학기 단위 육아휴직 사용 관련
19. 유학휴직시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
20. 유학휴직 중 휴학한 경우
22. 유학휴직 만료후 추가 연장
22.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23. 무단결근 인사처리 방안
24. 장교 임대자의 인사처리
25. 군복무 후 복직
26. 공무상 질병휴직
27. 적극행정 징계면제
28. 적극행정 징계면제 의결
29. 연가 일수
30.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31. 연가 공제 대상 여부(출산휴가)
3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33.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제출 여부
34. [가족돌봄휴가]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 일수
35. [육아시간] 사용 가능 사유

1.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외 근무

질 의

출·퇴근 시간이 학교장의 지시로 예를 들어 출근은 07:40, 퇴근은 18:00일 경우 학교장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근거는?

회 신

(단위학교별 탄력근무제 시행 전)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인 0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함

2. 교원의 서적 편집 및 판매 가능한지 여부

질 의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출판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이 편집대표를 맡아 자기의 소속·직책·성명을 기재함과 동시에 판권에 실인을 찍어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를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 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 저촉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맡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 여부

질 의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맡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친목회 등)의 경우는 사전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는 단지 내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4. 부동산임대업의 영리업무금지 저촉 여부

질 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동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신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5. 육아휴직 중 겸직가능여부

질 의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몇개월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단기간의 연구구역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는 경우 겸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휴직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 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참고 겸직허가 참고 사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20)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6. 병가에 대한 질의

질 의

- ①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 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 ② 직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직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 ③ 직무상 병가기간(년6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년2월)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①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② 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직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 ③ 소속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의 요건과 기간을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 연간 허가 가능한 병가기간은 직무상 병가와 일반병가를 합한 240일이 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연180일 동안을 다 사용하여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으면,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음.

7. 휴직기간 중 복무 관리

질 의

학교에서 교사에게 휴직을 허가한 경우 휴가를 받은 교사와 학교에서 해야 할 일?

회 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8. 복직 후 동일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인사처리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완치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이 재발되어 다시 근무가 곤란한 경우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총무처 인계] 12107-45, 1996. 1. 25.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다가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 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총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9. 임신 중 공무원의 육아휴직 관련 질의

질 의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 신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 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함.

10. 질병휴직 후 정상적인 근무 중 새로운 질병휴직 가능 여부

질 의

- ① 1997.12.1. 복직('97.5.16~'97.11.30까지 휴직)한 교사가 1998.8.6. 발병하여 질병휴가를 얻기까지 정상적인 상 태로 학급담임을 맡아 왔다면 1998. 10. 13일부터의 휴직은 새로운 휴직으로 간주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통산 1년 이내로 하였을 경우 1999.2.27. 전에 복직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근무상태가 가능하다면 복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교육부 교정 07000-11] 화신일 : 1999. 1. 7.

①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교사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복직후 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새로운 휴직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1년 이내의 휴직을 명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바, 본인이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진단서에 의 해 복직 만료되었거나 또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1. 해외유학 휴직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회 신

[총무처 인가 12107-308] 1996. 5. 18.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 ②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 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육아휴직 중 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육아휴직 중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복직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 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②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지체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③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임용권자)하여야 함

1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의 복직 관련(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해석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제3항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의 해석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공무원이 2010.1.1.~2012.12.31.까지 3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 2013.1.1.~1.30.일 기간 중 아무 때나 복귀신고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회 신

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30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국수속, 인수인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복직이 다소 늦어지는 휴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복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② 그러나 법에서는 30일 이내 복직신고하면 복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자는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고 30일 이내 복직신고하면 복직신고일에 복직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휴직기간 만료시점부터 실제 복직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되기 전까지는 휴직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4. 휴직의 사유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 여부(유학휴직→육아휴직)

질 의

유학휴직(고용휴직, 연수휴직, 동반휴직) 중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원칙적으로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을 2번 명하는 것이 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귀국하지 아니하고도 복직원을 받아 복직처리한 후 같은 날짜로 다시 육아휴직을 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5. 휴직의 사유를 변경하여 신청 가능 여부(질병휴직→육아휴직)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1호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16. 육아휴직 요건

질 의

육아휴직 요건 중 만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회 신

[교원정책과] 회신일 : 2010. 10. 28.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17.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질 의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민원조사담당관실] 회신일 : 2006. 10. 27.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18. 학기 단위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질 의

학기 단위로만 육아휴직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교원의 육아휴직 시기 제한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하다거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행정심판례] 08진차765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직장을 휴직하여 육아에 전념하였다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 관련하여「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피진정인이 교원의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은 육아휴직 사용 시 1학기, 즉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남자 교원은 최대 총 2회, 여자 교원은 6회를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는 효과를 낳고 있어 교원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제한은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고, 다른 교육청의 경우처럼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그렇다고 하여 교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원이 일반공무원이나 근로자와는 달리 방학이라는 휴업일을 갖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경우 대체 교사인 기간제교사의 활용이 어렵거나 교사의 교체로 인해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최초 휴직의 경우, 휴직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등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실제로 시기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더라도 방학 중에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46.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육아휴직 시기 제한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하다거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9. 유학휴직 시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

질 의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유학휴직 승인 후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한지?

회 신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 유학휴직 중 휴학한 경우

질 의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회 신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21. 유학휴직 만료후 추가 연장

질 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후 2년간(현행 3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회 신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회신일: 2016. 10. 10.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3. 무단결근 인사처리 방안

질 의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회 신

[교원정책과] 회신일: 2010. 10. 28.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한 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24. 장교 임대자의 인사처리

회 신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합니다.

25. 군복무 후 복직

질 의

군복무를 위한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회 신

먼저,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 면직합니다.

26. 공무상 질병휴직

질 의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회 신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상질병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요양승인(연장승인)기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27. 적극행정 징계면제

질 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제는 해당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업무처리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 적극행정 징계면제 의결

질 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면제 의결은 재량사항인지

회 신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29. 연가 일수

질 의

저는 작년에 기간제 경력이 11개월 며칠이 있고 올해 3월 1일자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연가 일수 계산에 기간 제 경력이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이 안된다면 제가 현재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회 신

연가는 연금법상의 인정하는 재직기간으로 기간제교사 경력은 포함되지 않으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31118호,2020.10.20.시행)에 따라 11일입니다.

참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30.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질 의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회 신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합니다.

참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117호(2021.6.15.))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간은 제외)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31. 출산휴가의 연가 공제 대상 여부

회 신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회 신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진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 할 수 없음

33.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제출 여부

회 신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4. [가족돌봄휴가]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 일수

회 신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35. [육아시간] 사용 가능 사유

회 신

별도의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3 절 교원의 징계

1. 징계절차 관련
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3.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
4.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5. 징계의결요구와 다른 사유로 징계의결한 경우
6. 사립교원 해임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7. 징계위원 기피의결 등
8. 교원 임명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징계 처분한 경우
9.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의 취지 등에 관한 사항
10. 징계권자가 징계재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11.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징계 절차 하자 치유 관련
13.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14.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
15. 제척과 기피
16. 징계위원회 위원 관련
17. 징계의결 요구 중 제한점
18. 징계처분 무효나 취소 경우
19. 수사에 따른 재징계 가능 여부
20. 출석통지서 수령 거부 경우
21. 사실심리와 징계의결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22. 징계의결요구서 징계 사유
23. 징계혐의자 진술권 포기 등
24. 품위손상 징계 수위
25.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6.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복직명령
27. 징계처분 일사부재리 위배 여부
28. 기피로 인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 변동 관련
29. 징계위원회 기피의결의 정족수
30. 절차상 하자의 경우
31. 징계혐의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
32. 징계처분 변경에 따른 보수 지급 등
33. “견책”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후 보수 및 승진임용제한
34. 소청심사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 재판의 판단이 다를 경우
35. 직위해제 중 휴직 기간 만료된 경우
36. 징계사유가 무죄 선고 된 경우
37. 사기죄에 대한 벌금 선고가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지
38.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불문”을 징계의결요구 기각으로 볼 수 있는지
39. 직위해제 상태에서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1. 징계절차 관련

질 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파면 및 해임은 교원의 임용사항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의 장의 제청, 법인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위와 관련한 징계절차는 징계 의결 요구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지

회 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3. 6. 25.

파면 및 해임은 교원의 임용에 속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4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의 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함

2.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질 의

교원징계위원회의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나, 동일 학교법인 소속 타 학교 교원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경우

회 신

[교원소청 2011-399]

예) ○○중학교 교원을 징계처분할 때 동일 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장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징계대상자의 교사로서의 자질,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징계대상자가 속하는 '당해 학교의 교원'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교원인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근무하는 ○○중학교 소속 교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함 (대법원 판례 95다34491) (교원소청 2011-399)

▶사립학교법 제6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3.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

질 의

징계의결 요구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결여한 경우

회 신

[교원소청 2008-22]

▶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 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대법원 판례 98두8858)

▶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전 선행되어야 할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결여한 징계처분은 임면권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교원 임면을 배제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겠음

4.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질 의

직권면직 사유 중 사립학교법 제58조제2항의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 신

[대법원 판례] 95다51847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의결요구와 다른 사유로 징계의결한 경우

질 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한 경우

회 신

[교원소청] 2011-215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없어 청구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방어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유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교원소청 2007-448)

▶ 징계의결요구사유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한 것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교원소청 2011-215)

6. 사립교원 해임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질 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92누13707

징계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 하신 동일 건(성적관련 비위행위)이 아닌 다른 건이 수사 도중 발생한다면 그 건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할 것임

7. 징계위원 기피의결 등

질 의

기피신청 된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피의결을 한 경우 등

회 신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과정에서 기피신청 된 2명의 징계위원은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지 않고 5인의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피의결을 한 것은 사립학교시행령 제24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공통의 사유에 기인하는 기피신청 대상자를 일괄배제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신청대상자에 대한 기피의결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사유에 기인하는 기피신청대상자들이 본인을 제외한 공통의 사유에 기인하는 기피신청대상자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 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음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판례 98다42547, 98두8858) (교원소청 2010-295)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 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

8. 교원 임명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징계 처분한 경우

회 신

[대법원 판례] 93누16277

예)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는데 임명권자가 해임으로 징계 처분한 경우 (반대의 경우도 해당)

▶ 법의 취지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9.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의 취지 등에 관한 사항

회 신

▶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 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하면 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함

▶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 93다1428)

10. 징계권자가 징계재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질 의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내용이 가법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회 신

[대법원 판례] 93누16277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11.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 신

[대법원 판례] 84누110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12. 징계 절차 하자 치유 관련

질 의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및 사후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회 신

[대법원 판례] 95다51847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13.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질 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판례] 95누18536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14.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

질 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의 규정 취지

회 신

[대법원 판례] 93다3745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한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됨

15. 제척과 기피

질 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제척과 기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척과 기피는 어떤 경우에 하며 어떻게 다른가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화신일 : 2011.3.18

징계의결 과정 중 “제척과 기피”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징계 위원장이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스스로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척”은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기피”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자 할 때 말합니다.

16. 징계위원회 위원 관련

질 의

사립학교법 제62조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수정-5인~11인으로 개정)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이사이면서 학교장인 경우) 5인의 징계위원이 구성되면 학교법인의 이사인 수가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교원 3명 이사 2명이면 학교장은 교원에 포함하나요? 이사에 포함되나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0. 11. 4.

사립학교법 제62조에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이사인 학교장은 교원과 이사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수가 징계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학교법인 이사 수의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이사이면서 교원인 학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 징계의결 요구 중 제한점

질 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은 무엇이며 타기관의 전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1. 6. 2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승진임용, 타 기관으로 전보,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의원면직, 정부포상 또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8. 징계처분 무효나 취소 경우

질 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징계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1. 6.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한 경우,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이 난 경우에는 말소가 됩니다.

19. 수사에 따른 재징계 가능 여부

질 의

징계 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경찰청수사(현재 검찰청 송치), 검찰수사 후 해당교사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파면 처분요청이 있는 연후 해당사건과 같은 비위사항에 대해 재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1. 3. 15.

징계 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당해 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불가쟁력,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된 이상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 하신 동일 건(성적관련 비위행위)이 아닌 다른 건이 수사 도중 발생한다면 그 건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1. 3. 15.)

20. 출석통지서 수령 거부 의 경우

질 의

징계혐의자가 배달된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 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2011. 3. 22.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1. 사실심리와 징계의결에 있어 징계위원의 동일성 유지

회 신

- ①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임. [총무처 소청결정 93-401]
- ② 1차회의시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 3명이 2차회의시에 출석하여 혐의자 불참하에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한 의결이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 [총무처 소청결정 96-706]

22. 징계의결요구서 징계 사유

질 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

회 신

[교원소청 2007-448]

- ① [판례]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와 같은 규정들은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임. [대법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 ② [소청] 징계대상자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고, 또 이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3. 징계혐의자 진술권 포기 등

질 의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8699, 판결]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차후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24. 품위손상 징계 수위

질 의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 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 내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사용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실 의무위반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함.

25.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회 신

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임.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 15763, 판결]

②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에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③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26.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복직명령

회 신

[총무처 인가 12107-468] 회신일: 1993.10. 18.

[회신] 정직처분은 복직을 전제로 미리 기간을 명시하여 명령한 것으로서 기간만료시점에서 복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복직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만료일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임.

27. 징계처분 일사부재리 위배 여부

질 의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신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28. 기피로 인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 변동 관련

질 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회 신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42547, 판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29. 징계위원회 기피의결의 정족수

질 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 소정의 기피의결의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회 신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42547,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립학교법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30. 절차상 하자의 경우

질 의

법원에서의 파면처분취소 사유가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닌 절차상의 하자인 경우 파면으로 재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복무 01152-1150, '85.11.4.]

원처분 취소판결이유가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니고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처분 내용대로 다시 파면으로 재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함.

31. 징계혐의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

질 의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양정보다 현저히 감경 의결되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된 사실이 있는 후, 사후 혐의자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허위진술자에 대해 허위진술을 사유로 재징계가 가능한지 또는 혐의자의 허위진술 책임에 대하여만 징계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복무 01152-57, '91.1.19.]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일종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징계의결 양정을 반복할 수 없음

32. 징계처분 변경에 따른 보수 지급 등

질 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되었던 자가 소청결정에 의해 정직3월로 변경된 경우 근무상황처리 및 보수지급에 대하여

회 신

[인기 12107-467, '93.10.18.]

해당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관에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실제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3월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황을 처리하여야 하며, 정직 기간 동안은 보수 2/3를 감하고 정직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함.

33. “견책”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 후 보수 및 승진임용제한

회 신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2호에 의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등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관련규정은 계속 유효함.

34. 소청심사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 재판의 판단이 다를 경우

질 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회 신

[대법원 판례 2012두122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5. 직위해제 중 휴직 기간 만료된 경우

질 의

휴직 중인 자가 형사 사건으로 제소되어 직위해제 처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사조치는?

회 신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신고를 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 사유 소멸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휴직에 따른 임용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휴직과 직위해제 처분은 각각 다른 법령 규정의 사유에 의해 행하는 별개의 임용 행위로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며 휴직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상태와는 상관없이 동법(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자를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36. 징계사유가 무죄 선고된 경우

질 의

파면처분사유가 된 뇌물수수 사실이 무죄선고 되었으므로 당초 파면처분은 처분청에서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취소되는지?

회 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소청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징계처분권자 자신도 이에 기속되어 동 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 또한 뇌물수수 혐의가 형사상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의 것이므로 현재 다투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되어야만 비로소 그 파면처분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복무 272-1276, 1983.11.5.)

37. 사기죄에 대한 벌금 선고가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지

질 의

공무원이 사기죄에 해당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회 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징계에 있어서 징계요구 사유의 인정 여부는 징계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정도 및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정상을 고려한 후 동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지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곧 징계사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01152-1243, 1985.12.31.)

38.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불문”을 징계의결요구 기각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 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법무 25001-150, 1987.8.3.]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자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 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징계 의결요구를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이 되었다 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9. 직위해제 상태에서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질 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직위해제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였을 경우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총무처인제203-2895, 1971.1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 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 10 장

교원 임용보고 서식(예시)

”

붙임 1 학교장 임명 승인 신청(예시)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학교장 임명 승인 신청

1. 관련: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3항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에 임명제한자에 해당되는 자를 학교장에 임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명승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학교장 임명제한자 임명 승인 신청서 1부
 2.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3. 결격사유 조회서/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회신서 각 1부
 4. 교원자격증(교장) 사본 1부
 5. 특수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자체점검표 1부. 끝.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	○○○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	(...) 접수 ()
우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비공개(6)

학교장 임명제한자 임명 승인 신청서

1. 임명 승인 신청자

학교명	직위 (소속)	성 명	생년 월일	교원자격증				정관상		임용 기간	비고
				자격 종별	발급 년월일	과목	NEIS 등 재 확 인	학교장 임기	학교장 정년 (년월일)		
										-	

※ 직위(소속): 교장 임용 전 직위 및 소속

※ 교원자격증: 교장임용예정자의 소지자격 기입

※ 학교법인 정관상 임기: 2년, 4년이내, 4년 등 해당 임기 표기

2. 임명 승인 신청자와 이사장과의 관계

임명 승인 신청자와 이사장과의 관계	이사장		비고
	성명	취임일자	

※ 이사장과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없음 등으로 표기

3. 이사회 개최 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 건	위원수	참석 인원	의결 정족수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학교 교장 임명 제한자 동의 안						

4. 법인 이사회 회의록 1부 (별첨)

5. 결격사유 조회서/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회신서 각 1부(해당자)

6.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별첨)

7. 특수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별첨)

8. 자체점검표 1부 (별첨)

자체 점검표

임명승인 기준항목	사립학교법 조항	세부내용	해당 여부
① 교장의 임명제한 사유	제54조의3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4조의3 제6항 각호의 사유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② 교원의 면직사유	제58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③ 교장의 해임요구 사유	제54조의2	1.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3.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④ 국가공무원 법제33조 해당여부	제54조의3 제1항4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호부터 8호까지 해당여부	
기타 제한 기준			확인 여부
⑤ 학교장 연령 제한 (만 세)			
⑥ 기타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중인 자			

【학교법인의 소속 학교장 현황】

법인 소속 설치·경영 학교	○○고	○○중	○○초	비고
소속 학교장이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해당여부	○/×	○/×	○/×	

붙임 2 교사임용희망서 (예시)

교사 임용 희망서

소 속 학 교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 4호에 의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합니다.

20년 월 일

교장 (인)

0000학원 이사장 귀하

붙임 3 교장 자격증 부관 삭제 요청 (예시)※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된 경우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시·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장 자격증 부관 삭제 요청

1. 관련

가.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관의 삭제)

나. -0000(2021.00.00.) “자격증 교부 공문 번호”

2. 교장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과 같이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였기에 부관 삭제를 요청합니다.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자격 종별	자격증번호 (발급년월일)	부관내용	수여조건 이행	비고
			중등학교 교장	바 제0000호 (2015.00.00.)	6개월 내에 00학교에 임용되는 조건 6개월 이내에 교장 자격연 수를 이수하는 조건	임용일 : 0000.00.00 자격연수 이수일 : 0000.00.00	

- 붙임 1. 교장자격증 원본 1부(별도송부)
2. 교장 임용 보고 공문 사본(스캔)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스캔) 1부. 끝.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

○○○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

(...)

접수

()

우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비공개(6)

붙임 4 교장 자격증 부관 삭제 요청(예시) ※ 계속 근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수여된 경우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시·도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장 자격증 부관 삭제 요청

1. 관련

가.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관의 삭제)

나. -0000(2019.00.00.) “자격증 교부 공문 번호”

2. 교장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과 같이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였기에 부관 삭제 요청합니다.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자격 종별	자격증번호 (발급년월일)	부관내용	수여조건 이행	비고
			중등학교 교장	바 제0000호 (2015.00.00.)	6개월 내에 00학교에 임용되어 계속 0년 근 무하는 조건 6개월 이내에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하는 조건	근무기간 : 0000.00.00 ~ 0000.00.00 자격연수 이수일 : 0000.00.00	

붙임 1. 교장자격증 원본 1부(별도송부)

2. 교장 임용 보고 공문 사본(스캔)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스캔) 1부

4. 경력증명서 사본(스캔) 1부. 끝.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

○○○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학원-

(...)

접수

()

우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비공개(6)

10-1 임용보고 서식

학교법인 ○○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장 임용 보고

-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을 임명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교장 임용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장 임용 보고

1. 임명자 명단

학교명	교장 임용 전 직위(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 격 증			
				종별	과목	발급일	NEIS 등재확인
OO고	교감	실명	1966.03.14	교장	없음	OO.03.14	O
OO학교	교장	실명	1966.03.14	교장	없음	OO.03.14	O

이사장과의 관계	임명제한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각호, 또는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해당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 여부	학교장 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년
직계비속	해당(제54조의3 제3항)	승인	3년

학교장 정년	중임 여부	임용기간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으로 임용 여부	비고
만62세	초임	2021.9.1~2025.8.31	해당없음	
만65세	중임	2021.9.1~2025.8.31	해당없음	

- ※ 자격증: 교장임용예정자의 소지자격 전부 기입(해당없는 경우 공란)
- ※ 이사장과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없음 중 택1하여 표기
- ※ 중임여부: 초임, 중임으로 기재
- ※ 학교장 임기 및 정년: 정관상의 기간을 확인하여 표기
- ※ 임명제한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관련): 해당, 해당없음으로 표기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해당자는 임용 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할청으로 승인 요청
-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해당자는 관할청 승인 여부 표기
- ※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 임용 여부: 해당, 해당없음으로 표기

2.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교장 임명 건	9	7	5	5	2	

3.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해당교원에게 교장 임용 통보 여부(예,아니오)	예
해당교원에게 임용사항 통보한 방법(문서통보, 임명장 수여 등)	임명장 수여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감 임용 보고

-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을 임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교감 임용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감 임명 보고

1. 임명자 명단

학교명	교장 임용 전 직위(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 격 증			
				종별	과목	발급일	NEIS 등재확인
OO고	교사(OO고)	실명	1966.03.14	교감	없음	OO.03.14	O
OO학교	교사(OO학교)	실명	1966.03.14	교감	없음	OO.03.14	O

임명년월일	임명제한 해당여부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으로 임용 여부
2021.12.01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12.01	해당없음	해당없음

※ 임명제한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관련): 해당, 해당없음으로 표기

※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 임용 여부: 해당,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교감 임용 건	9	7	5	5	2	

4.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임용예정사항			
성명	직위	소속		성명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실명	교사	OO고	교감	OO고	2022.01.01	교감 임용

5.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교감 임용 건	9	7	5	5	2	

6.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해당교원에게 교장 임용 통보 여부(예,아니오)	예
해당교원에게 임용사항 통보한 방법(문서통보, 임명장 수여 등)	임명장 수여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사 임용 보고

-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신규 교사를 임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교사 임용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사 신규채용(임용) 보고

1. 임명자 명단

연번	법인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자 격 증			
						자격종별	표시과목	발급년월일	NEIS 등재확인
1	OO학원	OO고	교사	실명	수학	중등2정	수학	OO.03.14	O
2	재단법인OO	OO학교	교사	실명	특수 중등	특수중등 2정	국어	OO.03.14	O

생년월일	임용년월일	이사장과의 관계	임명제한 해당 여부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으로 임용 여부
1996.03.14	2021.12.14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996.03.14	2021.12.14	친인척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담당과목: 개별학교의 교사 과목정원을 확인하고 신규채용자 정원에 해당하는 과목 작성

※ 이사장과의 관계: 배우자, 친인척, 해당없음으로 표기

※ 중임여부: 초임, 중임으로 기재

※ 임명제한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관련): 해당, 해당없음으로 표기

※ 명예퇴직 후 정규교원 임용 여부: 해당, 해당없음으로 기재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신규교사 임용 심의	9	7	5	5	2	

3.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임용예정사항				
성명	직위	소속			성명	직위	소속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OO고 신규교사 임용 건	실명	교사	OO고	2022.01.01	OO고 신규교사 임용

4.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신규교사 임용 건	9	7	5	5	2

5. 공개채용 절차

공고기간	총공고일수	공고방법 (공고장소)	채용방법	채용과목 및 채용인원	지원자격
2021.12.01~ 2021.12.8	8일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개채용	수학 1명	교원자격증 소지자

공개전형방법				비고
필기	수업실연 (실기)	면접	기타	
1차	2차	3차		

※ 공고기간: 공고 시작일-공고 마감일 표시

※ 총공고일수: 총 공고일수 표기

※ 공고방법: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 일간신문 등

※ 지원자격: 예) 2급 정교사(준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공고전형방법: 해당란에 진행된 채용방법 순으로 1차, 2차, 3차 등 차수를 표시

6. 결격사유조회/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결과

회보내용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조회
회보일자	2021.12.01	2021.12.01	2021.12.01	행정정보공동이용포탈 이용
회보기관	OO동주민센터	OO경찰서	OO경찰서	행정정보공동이용포탈 이용
특이사항				

7. 교원 정현원표(작성요령 확인 후 작성)

구분	교장	교감	교과교사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특수	계
			유치	초등	중고전공	진로진학 상담	교과교원 소계						
정 원													
현 원													
정규과부족													
휴직, 휴가 파견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결 원													
금회임명 기간제교원													
금회임명 신규교원													

〈작성요령〉

※ 교과교사 란은 해당란에만 작성

예) 초중고는 해당란에, 특수학교인 경우는 각 해당급으로 나눠서 작성

※ 휴직, 휴가, 파견자는 현원 포함(신규교원도 포함)

※ 기간제는 보고일 현재 총 기간제교원의 수(금회임명 기간제교사 포함)

※ 시간강사는 보고일 현재 총 시간강사의 수: 교사 결원 대체 시간강사만 해당(휴가, 휴직, 정원결원 등에 대한 대체)

※ 결원=정원-현원+(휴직, 휴가, 파견)-(기간제교원+시간강사)

※ 금회임명 기간제: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기간제교원의 수

※ 금회임명 신규교사: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신규교원의 수

※ 가산정원(진로진학상담,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교사(기간제교사 포함)의 경우, 학교에 해당 교사 정원이 배정된 경우만 채용 가능

8.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해당교원에게 교장 임용 통보 여부(예,아니요)	예
해당교원에게 임용사항 통보한 방법(문서통보, 임명장 수여 등)	임명장 수여

※ 기간제교사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기간제교사 임용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기간제교사 임용 보고서 1부.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경우)

1. 임명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자 격 증			
					자격종별	표시과목	발급년월일	NEIS 등재확인
1	OO고	기간제교사	실명	수학	중등2정	수학	OO.03.14	O
2	OO학교	기간제교사	실명	특수 중등	특수중등2정	국어	OO.03.14	O

생년월일	임용기간	임용사유
1996.03.14	2021.9.1~2022.8.31	육아휴직 대체
1996.03.14	2021.9.1~2022.8.31	한시적 결원 대체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심의	9	7	5	5	0

3.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임용예정사항				
성명	직위	소속			성명	직위	소속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OO고 기간제교사 채용 건	실명	교사	OO고	2022.03.01	기간제교사 임용

4.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기간제교사 채용 건	9	7	5	5	0

5. 공개채용 절차

공고기간	총 공고일수	공고방법 (공고장소)	채용방법	채용과목 및 채용인원	지원자격
2021.12.01~ 2021.12.8	8일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개채용	수학 1명	교원자격증 소지자

공개전형방법				비고
필기	수업실연 (실기)	면접	기타	
1차	2차	3차		

※ 공고기간: 공고 시작일-공고 마감일 표시

※ 총공고일수: 총 공고일수 표기

※ 공고방법: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 일간신문 등

※ 지원자격: 예) 2급 정교사(준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공고전형방법: 해당란에 진행된 채용방법 순으로 1차, 2차, 3차 등 차수를 표시

7. 교원 정현원표(작성요령 확인 후 작성)

구분	교장	교감	교과교사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 담	특수	계
			유치	초등	중고 전공	진로진학 상담	교과교원 소계						
정 원													
현 원													
정규과부족													
휴직, 휴가 파견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결 원													
금회임명 기간제교원													
금회임명 신규교원													

〈작성요령〉

- ※ 교과교사 란은 해당란에만 작성
예) 초중고는 해당란에, 특수학교인 경우는 각 해당급으로 나눠서 작성
- ※ 휴직, 휴가, 파견자 현원 포함(신규교원도 포함)
- ※ 기간제는 보고일 현재 총 기간제교원의 수(금회임명 기간제교사 포함)
- ※ 시간강사는 보고일 현재 총 기간제교원의 수: 교사 결원 대체 시간강사만 해당(휴자, 휴직, 정원결원 등에 대한 대체)
- ※ 결원=정원-현원+(휴직, 휴가, 파견)-(기간제교원+시간강사)
- ※ 금회임명 기간제: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기간제교원의 수
- ※ 금회임명 신규교사: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신규교원의 수
- ※ 가산정원(진로진학상담,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교사(기간제교사 포함)의 경우, 학교에 해당 교사 정원이 배정된 경우만 채용 가능

6.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해당교원에게 교장 임용 통보 여부(예,아니요)	예
해당교원에게 임용사항 통보한 방법(문서통보, 임명장 수여 등)	임명장 수여

※ 기간제교사 임용권이 학교장에 있는 경우

○○○○학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우리학교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기간제교사 임용 보고서 1부. 끝.

○○○○학교장

협조자

시행 ○○고등학교-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1. 임명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자 격 증			
					자격종별	과목	발급년월일	NEIS 등재확인
1	OO고	기간제교사	실명	수학	중등2정	수학	OO.03.14	O
2	OO학교	기간제교사	실명	특수 중등	특수중등2정	국어	OO.03.14	O

생년월일	임용기간	임용사유
1996.03.14	2021.9.1~2022.8.31	육아휴직 대체
1996.03.14	2021.9.1~2022.8.31	한시적 결원대체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심의	9	7	5	5	2

3. 공개채용 절차

공고기간	총 공고일수	공고방법 (공고장소)	채용방법	채용인원	지원자격
2021.12.01~ 2021.12.8	8일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개채용	1명	교원자격증 소지자

공개전형방법				비고
서류	필기	수업실연(실기)	면접	
1차	2차	3차		

※ 공고기간: 공고 시작일-공고 마감일 표시

※ 총공고일수: 총 공고일수 표기

※ 공고방법: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나라일터, 일간신문 등

※ 지원자격: 예) 2급 정교사(준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공고전형방법: 해당란에 진행된 채용방법 순으로 1차, 2차, 3차 등 차수를 표시

4. 이사회 개최결과

기간제교사 임용권 학교장에게 위임	예시) 정관 제35조
--------------------	-------------

5. 교원 정현원표(작성요령 확인 후 작성)

구분	교장	교감	교과교사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 담	특수	계
			유치	초등	중고 전공	진로진학 상담	교과교원 소계						
정 원													
현 원													
정규과부족													
휴직, 휴가 파견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결 원													
금회임명 기간제교원													
금회임명 신규교원													

〈작성요령〉

※ 교과교사 란은 해당란에만 작성

예) 초중고는 해당란에, 특수학교인 경우는 각 해당급으로 나눠서 작성

※ 휴직, 휴가, 파견자 현원 포함(신규교원도 포함)

※ 기간제는 보고일 현재 총 기간제교원의 수(금회임명 기간제교사 포함)

※ 시간강사는 보고일 현재 총 기간제교원의 수: 교사 결원 대체 시간강사만 해당(휴자, 휴직, 정원결원 등에 대한 대체)

※ 결원=정원-현원+(휴직, 휴가, 파견)-(기간제교원+시간강사)

※ 금회임명 기간제: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기간제교원의 수

※ 금회임명 신규교사: 금회 보고하고자 하는 총 신규교원의 수

※ 가산정원(진로진학상담,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교사(기간제교사 포함)의 경우, 학교에 해당 교사 정원이 배정된경우만 채용 가능

6.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해당교원에게 교장 임용 통보 여부(예,아니요)	예
해당교원에게 임용사항 통보한 방법(문서통보, 임명장 수여 등)	임명장 수여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원 전보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전보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불임 교원 전보 보고서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원 전보 보고

1. 전보자 명단

연번	전임교	후임교	직위	성명	생년월일	호봉	담당과목
1	OO고	OO중	교사	실명	1996.03.14	20호봉	국사

자 격 증				전(입)보일자
종별	과목	발급일	NEIS 등재확인	
중등2정	국사	OO.03.14	O	2021.12.01

2. 교원인사위원회 개체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교사 전보 건	9	7	5	5	0	

3.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성명	직위	소속		성명	현직		임용예정사항			
					직위	학교명	직위	학교명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실명	교사	OO고	교사	OO중	2022.01.01	OOO교사 전보

4.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OOO교사 전보 건	9	7	5	5	2	

※ '고등학교 <=> 중학교'간 전보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 모두 보고

※ 의원면직, 사망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의 경우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원 면직(의원면직, 사망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 면직(의원면직, 사망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교원 면직(의원면직, 사망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원면직)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의원면직) 1부.
 4. 비위사실조사 확인서(의원면직)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 비공개(6)

교원 면직 보고

[의원면직, 사망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1. 면직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 과목	생년월일	면직 또는 퇴직년월일	사유	NEIS 입력유무	의원면직 신청자 대상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에 따른 확인 여부 (정규교원 의원면직자만 작성)
1	OO고	교사	실명	수학	1996.03.14	2021.12.01	의원 면직	○	○

※ 면직일 작성 시 유의사항: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사망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작성 제외)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교사 의원면직 건	9	7	5	5	2

3.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사망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작성 제외)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성명	직위	학교명		성명	현직		임용예정사항			
					직위	소속	직위	학교명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실명	교사	OO고	교사	OO중	2022.01.01	OOO교사 의원면직

4. 이사회 개최결과(사망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작성 제외)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OOO교사 의원면직의 건	9	7	5	5	2

※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면직하는 경우

○○○○학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기간제교사 면직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우리학교에서 임용 보고한 기간제교사가 불임과 같이 면직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임용권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법인에서 보고)

붙임 기간제교사 면직 보고서 1부. 끝.

○○○○학교장

협조자

시행 ○○고등학교- () 접수 ()

0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기간제교사 면직 보고

1. 면직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 과목	생년월일	면직 또는 퇴직년월일	사유	NEIS 입력유무	의원면직 신청자 대상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에 따른 확인 여부 (정규교원 의원면직자만 작성)
1	OO고	교사	실명	수학	1996.03.14	2021.12.01	의원 면직	○	○

※ 면직일 작성 시 유의사항: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교사 의원면직 건	9	7	5	5	2

학교법인 ○○학원

제 목 교원 직권면직 보고

- 붙임 1. 교원 직권면직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징계의결서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전화 / 전송 / 비공개(6)

교원 직권면직 보고

1. 면직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면직 또는 퇴직년월일	사유	NEIS 입력유무
1	OO고	교사	실명	수학	1996.03.14	2021.12.0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직권면직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확인 후 해당 조항 작성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2021.12.01	2021.12.24	OO고 교사 직권면직 건	9	7	5	5	2

3. 당해 학교장 제청사항

제청자			제청일	제청사항						
성명	직위	학교명		성명	현직		임용예정사항			
					직위	학교명	직위	학교명	임용일자	임면내용
학교장 실명	교장	OO고	2021.12.24	실명	교사	OO고	교사	OO중	2022.01.01	OOO교사 직권면직

4. 징계위원회 개최결과(징계위원회 개최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OOO교사 직권면직의 건	9	7	5	5	2	

5.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고 OOO교사 직권면직의 건	9	7	5	5	2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원 징계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고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교원 징계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징계의결서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원 징계 보고

1. 징계사항 보고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징계년월일	징계양정	사유	NEIS 입력유무
1	OO고	교사	실명	수학	1996.03.14	2021.12.01	정 직3월	품위유지위반	○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O교사 징계의결요구 사안의 건	9	7	5	5	2	

3. 학교장제청, 임용권자(학교법인) 징계의결 요구일,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일

학교장 제청일	임용권자(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일 (임용권자-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일 (임용권자-징계대상자)
2021.12.01	2021.12.01	2022.01.20

4.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일 (징계위원회-임용권자)
2021.12.01	2021.12.24	OOO교사 징계의결요구 사안의 건	9	7	5	5	2	2021.12.28

5. 이사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24	OOO교사 징계의결 요구 건	9	7	5	5	2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원 직위해제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 직위해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교원 직위해제 보고서 1부.
2.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원 직위해제 보고

1. 직위해제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직위해제 년월일	직위해제 사유	NEIS 입력유무
1	OO고	교사	실명	수학	1996.03.14	2021.12.0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O

※ 직위해제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작성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03	OOO교사 징계의결요구 사안의 건	9	7	5	5	2	

3. 학교장 제청 및 이사회 개최결과

학교장 제청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5	2021.12.05	2021.12.24	OOO교사 징계의결 요구 건	9	7	5	5	2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원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교원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 보고서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원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 보고

1.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임용사항	임용(휴직, 겸임, 파견) 기간	사유
1	OO고	교사	실명	1996.03.14	미술	휴직	2021.9.1.~2022.8.31	육아휴직 (둘째)
후임충원방법		NEIS 입력유무		비고(파견의 경우 파견기관 작성, 겸임의 경우 겸임기관 작성)				
기간제교사		O		서울시교육청				

※ 임용일(기간): 휴직(휴직연장, 겸임, 파견) 기간

※ 사유

- 휴직 또는 휴직연장일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예)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첫째) 등]
- 파견일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 작성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03	OO고 OOO교사 육아휴직 건	9	7	5	5	2	

3. 학교장 제청 및 이사회 개최결과

학교장 제청일	이사회 소집일	이사회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5	2021.12.05	2021.12.24	OO고 OOO교사 육아휴직 건	9	7	5	5	2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원 복직(파견 복귀)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복직(파견 복귀)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교원 복직(파견복귀) 보고서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원 복직(파견 복귀) 보고

1. 복직(파견복귀)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과목	임용사항	휴직(파견) 기간	복직(파견복귀)일
1	OO고	교사	실명	1996.03.14	미술	복직	2021.09.01~2022.08.31	2022.09.01

사유	NEIS 입력유무	비고(파견의 경우 파견기관 작성)
육아휴직 복직	O	서울시교육청

※ 사유

- 휴직 또는 휴직연장일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예)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첫째) 등]
- 파견일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 작성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03	OO고 OOO교사 육아휴직 복직 건	9	7	5	5	0	

3. 학교장 제청 및 이사회 개최결과

학교장 제청일	이사회 소집일	이사회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5	2021.12.05	2021.12.24	OO고 OOO교사 육아휴직 복직 건	9	7	5	5	0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목 교사 과목변경(자격변동) 보고

-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사 과목변경(자격변동)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교사 과목변경(자격변동)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 비공개(6)

교사 과목변경(자격변동) 보고

1. 임명자 명단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당초 과목(자격)	변경 과목(자격)	NEIS 교원자격 확인
1	OO고	교사	실명	1996.03.14	수학	영어	O

학교장 제청일자	이사회 의결일자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일자
2021.12.05	2021.12.20	2021.12.20

학교법인 ○○ 학원

수신자 교육감(과장)

(경유)

제 목 교장(교감) 직무대리 임용 보고

1. 관련: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교장(교감) 직무대리를 임용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교장(교감) 직무대리 임용 보고서 1부.

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직무대리 운영체제 해소 계획서(자율서식) 1부. 끝.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협조자

시행 학교법인- () 접수 ()

우 / http://www.
전화 /전송 / 비공개(6)

교장(교감) 직무대리 보고

1. 임명자 명단(작성 필수)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임명사항	
			소속	직
OO고	실명작성	1996.03.14	OO고	교감직무대리

임명 전 직위		임용기간	임용사유
소속	직		
OO고	교사	2022.03.01.~교감 임용시까지	교감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교감만 작성)

소집일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1	2021.12.03	OO고 OOO교사 교감직무대리 건	9	7	5	5	2	

3. 학교장 제청(교감만 작성) 및 이사회 개최결과(교장 및 교감 작성)

학교장 제청일	이사회 소집일	이사회 개최일	안건	위원수 (명)	참석인원 (명)	의결정족수 (명)	찬성 (명)	반대 (명)	비고 (특이사항)
2021.12.05	2021.12.05	2021.12.24	OO고 OOO교사 교감직무대리 건	9	7	5	5	2	

※ 2번~3번은 정관 및 인사세칙을 확인 후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



총

괄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기획·연구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이성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책팀장)

김소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이은아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집

필

김영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박재현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이치형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김구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이지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황준호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이승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이상민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김일환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하치훈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노영주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무관)

강연석 (경상남도교육청 주무관)

송정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차용훈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김형진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임선옥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이미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서영 (전라북도교육청 주무관)

윤일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이윤수 (제주시교육청 장학사)

김남우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이상훈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민형 (경기도교육청 주무관)

발 행 인 최교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http://www.ncge.or.kr>)